



노동자 투쟁
현대차/기륭전자/
KEC/동희오토

▶ 5, 13면

위키리크스 폭로
학살과 고문으로
점철된 이라크 전쟁

▶ 6면

진보 정치 재편 논의
진보신당 새 지도부 출범 /
문성근의 야권단일정당론 비판

▶ 11면

상설연대체
쟁점과
좌파적 해답

▶ 10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미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205-146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 3

Left21.com

2010년 10월 30일 ~ 11월 12일 | 제43호 | 값 1,800원

리포트21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사수! 노조법 전면재개정! G20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11월 7일·11일, G20 항의 시위로 집결하라

G20 서울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이 명박은 '국가 브랜드 제고', '국격 상승' 등을 주문처럼 외며, 반대 목소리도 모조리 차단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정반대로 G20 항의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에게서 그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이명박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도 G20에 반대해야 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명박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것들을 생각해 보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자 감세, 4대강 삼십, 노조법 개악 등 하나같이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뽑아 부자 배 채워주는 것들이다.

작업장에서 G20 항의의 운동을 건설하고 있는 건설노조원 박재순 씨는 "일단 이명박이 한다고 하면 노동자들은 안 좋아합니다. 정부가 G20을 선전하면 할수록 조합원들은 의심합니다" 하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견을 억누르려고 언론 탄압, 집회·시위의 자유 공격, 국가보안법 이용한 마녀사냥 등을 지휘해 왔다.

G20은 이런 경제 위기 고통전과 민주주의의 공격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

G20 회의에서 긴축을 합의하던 부자를 위한 경기 부양을 합의하던 모두 노동자·민중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일 뿐이다. 그리스 정부의 긴축이 노동자 계급에 고통을 전가하고 경제

위기 후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으로 기업주들이 돈 잔치를 벌인 것처럼 말이다.

악행

둘째, G20 회의의 결과는 그 참가자들의 면면만 봐도 알 수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지배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G20이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연금제도를 개혁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오늘날 학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캐머룬이나 독일의 메르켈도 마찬가지다.

박재순 씨는 "G20이라는 게 있는 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

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고 주장했다.

셋째, 지배자들의 위선적 목소리와는 다른 진보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G20이 제시하는 부자들을 위한 경제 위기 해결책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대안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로 이윤 체제의 문제점과 기업주·각국 지배자들의 무능이 어느 때보다 밝히 드러났다.

그런데, 각국 정상이 모여 자신들의 무능을 덮고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 바로 G20 회의다. 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반대 목소리는 무력을 동원해서 억누려 한다.

진보진영은 이런 협박에 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진보적

대안을 주장해야 한다.

대학에서 G20 반대 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대학생 오선희 씨는 <레프트21>에게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G20 항의의 운동이 촛불 이후로 다 같이 모여 정부에 항의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대학생들도 함께 정부와 기업주에 맞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G20 항의의 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지면 이명박을 더 큰 정치 위기로 내몰 수 있고 이명박에 맞설 수 있다는 우리의 자신감도 더 커질 것이다.

박건희

▶ 관련 기사 4면, 8~9면

국가에 맞서 굳건히 싸우는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들

프랑스 우익 정부는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과 거리 시위를 강력한 탄압으로 굴복시키려 한다. 지난주(10월 22일)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폴라니'(폭동 진압 경찰)들을 풀어 정유공장의 파업 피켓 대열을 공격했다.

정부는 정유공장 노동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어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사르코지는 파업을 파괴하려고 군대에 동원했다.

그는 마르세유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파업과 학생들을 공격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파업과 시위가 한층 더 고조된다면 이런 국가 테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노조 지도자들은 국가 공격에 직면해 파업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번 주 목요일(10월 28일) 수많은 노동자가 파업과 시위에 참가할 것이고 11월 6일에도 다시 한 번 행동에 참가할 것이다. ▶ 3면으로 이어짐



10월 19일 프랑스 연금개악 반대 파업집회

세상은 요지경

“카를라, 널 원망하진 않아. 너도 그 늙한데 당한 것뿐이잖아”

사르코지와 그의 부인을 비롯한 프랑스 시위대의 팻말

“경찰이 국민들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이명박,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더니 이렇게?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 ... 괴잉복지가 되다 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 되고”

‘친서민’ 총리 김황식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한다든지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음향대포에 집착하는 조현오

“꿈에 철도노조가 임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의 개꿈

“김재규는 극심한 발기부전에 시달렸대!”는 정보를 들었다. ... 건강한 차지철을 보면서 김재규는 ‘남성의 싸움’에서도 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차지철을 싸고도는 박 대통령이 미웠을 것”

〈중앙일보〉논설위원 김진

“들판에 쥐새끼들이 득실거리는 데 어찌 풍요를 바라겠습니까. 풍요를 바란다면 쥐악을 뿌려서라도 쥐새끼들을 박멸해야죠”

드라마 ‘대물’의 한 대목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는 거 자체가 문제야! 근데 뭐? 월차! 위~얼~차! 어디 월차를 내 개념 없이. 으~슬 으~슬 감기엔 판피린 큐”

민주노총에 항의 받은 개념없는 감기약 광고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 (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주세요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난 호 《레프트21》온라인 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기사는 ‘지도자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G20 지배자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 주자’, ‘북한 3대 권력 세습! 민주노동당의 혼란스럽고 군색한 침묵’, ‘독자편지(슈퍼스타K2) - 김동과 화방 만 드릴 수 없는 이유’, ‘[G20 뒷방 토론회] 정부 측 논리의 군색함과 위선이 드러났다’ 등이었습니다.

www.left21.com

“《레프트21》판매 탄압은 언론 자유 탄압”

10월 21일 《레프트21》판매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김지태 대표(사진)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모두진술이다. 김지태 대표의 당당한 모두진술에 재판 방청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다음 재판은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여기 있는 우리 6인은 지난 5월 7일 강남역에서 진보 격주간 신문 《레프트21》을 판매하다 강제로 연행됐고,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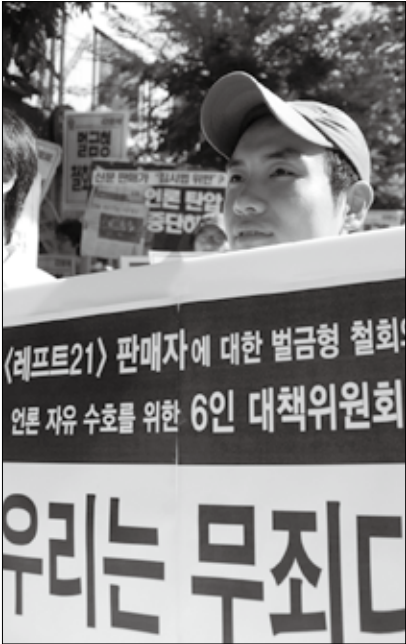
다. 《레프트21》이 창간한 지난해 3월부터 1년 반 넘게 해 온 일을 갑자기 집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의견을 형성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언론은 그러한 언론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정견을 드러내고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레프트21》도 언론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언론의 정당한 판매 행위를 왜곡했습니다. 법에 등록된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6인을 경찰이 불법 연행함
6월 26일	법원이 6인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함
7월 21일	검찰이 선고 한 달 만에 벌금 지로 용지를 보냄



김지태 대표

정기간행물인 《레프트21》판매 행위를 두고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건네 주었다”며 사실을 조작했습니다.

또 검찰은 우리가 《레프트21》을 판매하며 사용한 팻말·몸자보에 적힌 문안과 말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자세히 적어 놓고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우리가 “안보위기는 사기다.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IMF 진축에 맞선 그리스 반란, 한국에서도 저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견해

7월 22일	‘대책위’를 구성함
7월 25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7개 진보시민단체가 법원의 명령을 비난하는 연대성명을 발표함
8월 5일	경찰의 위법 체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를 표현했으니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안들은 당시 우리가 판매하던 《레프트21》의 앞면과 뒷면 표제였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위해 신문의 핵심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신문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데 《레프트21》만 유독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이면 〈조선일보〉의 전광판도 문제 아닙니까?

물론 《레프트21》의 판매 방식은 다른 언론과 다릅니다. 자본과 권력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진보 신문 《레프트21》은 독자와의 소통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레프트21》은 우리 6인 같은 신문 지지자들이 몸소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레프트21》의 특징을 문제삼아 기소를 했고, 법원은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중잣대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배경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행된 5월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선거법 등을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할 때였습니다.

연행 당시 경찰은 우리에게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며 주장 내용을 문제삼는 협박을 했습

8월 6일	벌금형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함. 법원이 뒤늦게 보낸 약식명령문이 도착함
8월 16일	벌금형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림. 재판에 앞서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민연련 등이 공동 주최해 항의 집회를 함
10월 21일	2차 재판 진행

이명박 정부의 ‘청년 내일 만들기’

‘언 발에 오줌 누기’거나 사기거나

10월 14일 이명박 정부가 ‘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12년까지 일자리를 7만 개 이상 늘리기,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 확대 지원,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가 그 내용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만들겠다는 일자리 7만 1천 개는 실질 청년 실업자 수의 5.6퍼센트밖에 안 된다. 공식 청년 실업자 29만 5천 명에 취업 준비생 62만 6천 명, 무직 인구 중 청년 32만 2천 명을 더하면 사실상 청년 실업자는 1백24만 3천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는 1만 2천 개에 불과하다. 이것은 2009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 채용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고용 형태도 분명치 않을 뿐더러 재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 2011년 예산안에서 청년 고용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유연근로’와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공공 부문 일자리가 19만 6천 개 줄었다.

남탓

이명박은 학생들의 고학력과 높은 눈높이가 실업의 원인인 양 말한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나라는 뭐하냐? 학교는 뭐하냐? 우리 부모는 뭐하냐? 등 남 탓만 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 근거해 이명박 정부는 부실 대학 퇴출 같은 대학 구조조정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수도권 상위 대학이 아니라, 토익·토플 점수가 높지 않으면, 어학 연수

경험이 없으면, 하다못해 자격증 하나라도 없으면 ‘스펙’ 부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이다.

어릴 때부터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성적 경쟁에 시달리고, 연간 1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했던 학생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바라는 게 어째서 문제인가.

청년 실업의 원인은 청년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돈을 써야 한다.

나지현

참여연대가 한나라당에 ‘친서민’ 덧칠을 해 주다

대 사회경제국장장은 “기대 이상의 진지한 논의의 장”이었다며 호평했고,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도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많이 들었”고, “서민의 구체적 쟁점을 많이 접하고 고민하는 걸 보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그러나 지난 시절 노사정회의나 정부·여당과의 협의의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한나라당은 곧바로 뒤통수를 쳤다.

정책간담회 직후 한나라당이 진보진영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채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분리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해 온 대부분의 진보진영은 ‘분리 처리’가 사실상 상생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한



참여연대 정책간담회

이런 식의 대화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일까?

나라당의 ‘시간 끌기’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한나라당 홍준표가 “한국의 대표적 진보단체가 한나라당과 [정책]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크다”며 한껏 우러먹는 동안 참여연대 등은 뒤통수만 맞은 것이다.

반대로 얼마 전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

명박이 초청한 청와대 오찬을 거부하는 결단을 내렸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붙이고, KEC·기륭전자 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식과 농성으로 항거”하는 상황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청와대 오찬에 불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한 옳은 태도였다.

참여연대 지도부처럼 자본가 계급 정

박성환

프랑스의 계급투쟁

“우리 투쟁은 사르코지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투쟁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는 파리 근처의 초대형 정유공장인 그랑드피르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의 한 조합원은 <소셜리스트 워커>에게 정부의 노동자 공격과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 의지에 관해 말했다(경영진과 경찰의 위협 때문에 그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경찰은 그랑드피르 정유소 봉쇄를 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10월 11일부터 사르코지의 계획에 반대해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여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투쟁의 최전선에 있고 우리 파업이 정부에게 큰 부담이란 것을 잘 압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

을 때 연대를 요청할 수 있는 노동자와 주민들의 수를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을 때 순식간에 1백여 명이 우리를 방어하려고 모였습니다. 진정한 연대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많은 경찰이 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엄청난 폭력을 써 우리의 봉쇄를 뚫었습니다.

“경찰 폭력으로 노조원 세 명이 다쳤습니다. 한 명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 명령에 근거를 두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업무로 복귀하지 않으면 최대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들은 ‘국익 보호’가 목적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계급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박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부 업무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다. 현재 우리는 공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봉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석유 부족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리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코지 정부가 노동자의 파업권을 박탈하도록 가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파업과 시위가 사르코지를 굴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출처 Jean-Baptiste

10월 21일 파업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 “사르코지와 피용(총리)은 사회복지 파괴범이다”

국가에 맞서 굳건히 싸우는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들

▶ 1면에서 이어짐

신연금법은 국회 통과와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다. 이 법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62세로 상향 조정할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67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납입금도 늘어난다.

사르코지는 사람들이 지치고 그들의 사기가 낮아지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지는 않다.

화요일[10월 26일] 프랑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대거 투쟁에 나섰다. 사르코지 정부는 학기 중간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투쟁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파리에 거주하는 학생인 지밀라는 <소셜리스트 워커>에게 이렇게 말했다. “2006년에도 휴일이 ‘최초고용계약’ 제도(CPE)에 반대하는 청년 혁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휴일에도 투쟁은 지속됐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연금 문제, 정년 연장으로 청년이 일자리를 얻기 더 힘들어지는 문제, 더럽고 치사한 사르코지 정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우리 구호는 이렇게 합니다. ‘25살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67세에도 계속 착취받아야 한다니. 싫다. 싫다. 싫어!’”

학생들의 봉쇄 활동으로 많은 학교와 대학 10여 곳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폐쇄됐다.

철도와 항만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마

르세이유에서는 항만 파업으로 배 73척이 정박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는 원유를 담은 유조선 37척, 정제유를 담은 배 19척과 천연가스를 담은 배 10척이 포함돼 있다.

지난주에 파리의 티루 소각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은 이번 주까지 점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마르세이유는 ‘반란의 도시’가 됐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쓰레기 1만 톤이

곳곳에 쌓여 있다. 정부는 군대를 투입했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학교 급식 노동자와 보육원 노동자들도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을 지속하고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자는 압력을 [노조 지도자들에게] 넣고 연대를 강화하면 프랑스 노동자들은 이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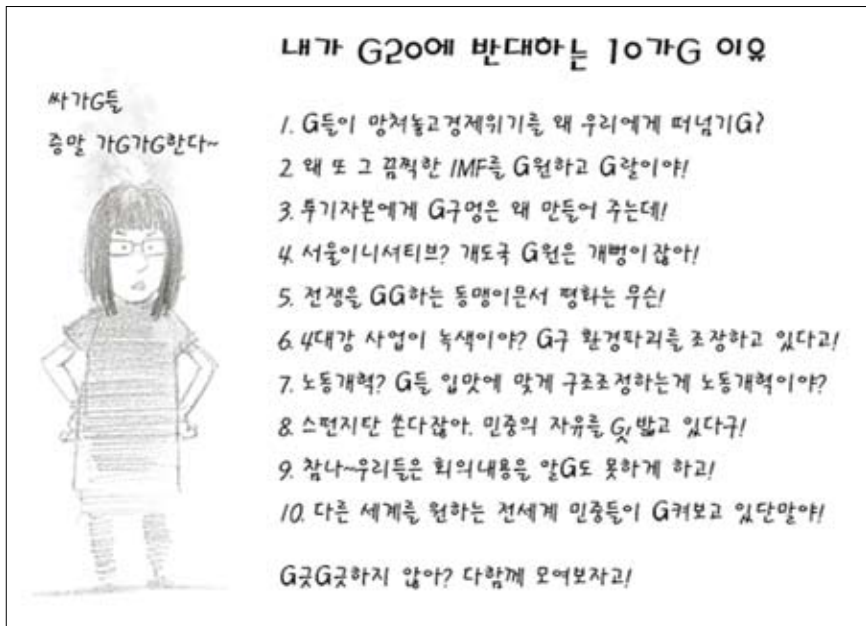
찰리 کم버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반역 김용욱

플라주 ㉔

플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일루션

분석

한국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처럼 싸울 수 있을까?

혈관에 피가 흐르는 사회주의자라면 프랑스 투쟁 소식에 크게 힘을 받았을 것이다. 친구나 동료에게 ‘우리도 프랑스처럼 해야 해’ 하고 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그러면 좋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인들은 별것도 아닌 것에도 바리케이드를 쌓을 준비가 된 사람들인 반면, 이 나라에서는 시위나 파업을 욕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한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프랑스 노조 조직률(8퍼센트)이 한국(10퍼센트)보다 더 높지 않다는 점을 알고는 놀란다.

그러나 95퍼센트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다. 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되며, 이 노동자들은 노조들이 자신을 위해 협상한다는 점을 잘 안다. 반면에 이 나라에서 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거의 단체협약 내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강성 노조’의 투쟁 효과가 나머지 부문에도 파급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낮으면 싸울 수 없다는 말은 틀린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 노조 지도자들이 더 우수한 것일까? 한국의 노조 지도자들과는 달리 프랑스 노조 지도자들은 사자후를 토하는 선동가들인가?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근본적 차이는 없다. 연금 개혁 반대 투쟁에서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지도자 베르나르 티보는 결정적 국면마다 기층의 압력을 받아서야 운동을 전진시키곤 했다.

전통

역사적 배경은 어떤가? 프랑스 노동자들은 대충이라도 자국 혁명 전통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도 4·19 혁명부터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지는 전통이 있다.

그럼 차이는 무엇인가? 지난 25년 동안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들은 — 패배와 후퇴도 있었지만 — 대단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1995년에 대규모 파업과 시위로 알렉 쥐페 총리가 물러났다. 또, 2005년 파리 외곽 빈민가의 반란은 광범한 분노를 산 최초고용계약을 철회시킨 2006년 파업과 학생 시위로 연결됐다.

사람들은 싸우면 이길 수 있고, 전투적으로 싸울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얻었다.

이 나라에서도 정부의 노동법 개혁을 막아낸 1997년 노동자 파업이 있었고, 우파의 반동 시도를 저지한 2004년 탄핵 반대 투쟁이 있었다.

또, 2008년에는 우파 정부를 쫓쫓매게 한 1백만 촛불항쟁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들은 1997년 IMF 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며 겪었던 고통과 불안감을 기억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가 이어졌고 투쟁으로 공격을 막아내기도 했지만 패배와 양보 교섭의 기억도 남아 있다. 특히 그 후 몇 차례 있었던 노동법 개혁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우유부단한 대응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물론, 그것은 이 나라 노동자들의 어떤 한계 때문이 아니라 노조 지도자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실패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노조와 기층 조합원들은 여전히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확신과 자신감이 높지 않다. 더구나, 그들의 지도자들이 자주 후퇴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런 상황은 변할 수 있다. 그것도 빨리 변할 수 있다. 프랑스의 높은 투쟁 수준은 누적적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자신감도 낮았고 노조 지도자들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는 회의적 정서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노조 지도자들의 파업 호소가 연 기회를 이용해 파업과 시위를 조직했고, 투쟁의 수위가 눈덩이 불듯이 커졌다. 노동자들이 대중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점차 깨달으면서 자신감이 커졌다.

따라서 한국 노동자들이 ‘프랑스의 길’을 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조직하고 노동 운동 내 비판관에 맞서 투쟁을 벌여야 한다. 반격이 먹힌다는 것을 사례로 입증해야 한다. 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전염되듯이 확산된다.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 기륭전자, KEC 점거 파업 등에서 노동자들의 전투성과 저항 정신은 인상적이다.

이 투쟁(과 다른 여러 투쟁)은 한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런 분노는 프랑스식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



G20 대응 공동행동주간선포 및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의 규탄 기자회견 “G20 정상회의는 반민중적 회의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의 파탄이 민중에게 도움이 된다.”

“G20에 맞서는 것이 노동권과 고용을 지키는 길”

노동조합들이 G20 회의의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11월 11일 확대간부파업을 결정했다. 11월 1일에는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1백 군데 이상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옥세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을 진행할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G20과 현재 진행되는 노조 탄압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죠. G20에 맞서는 것이 노동기 본권을 지키는 것이고 고용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하반기 핵심 정책이 G20인 만큼 우리도 이에 맞서면서 하반기 투쟁 전선을 쳐야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G20에 항의하는 운동을 건설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진영 서울본부 조직부장의 말이다.

“서울 여섯 지역에서 지역 단체들, 정당들과 함께 선전전과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G20을 잘 모르는데 캐나다 G20 회의 운동이나 최근 프랑스 파업 영상을 보여 주면서 우리도 저렇게 싸우자고 말해요.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자들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교조는 정부의 교사 대량 징계에 항의하는 투쟁을 선포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노조 지도자와 정상들에게 한국 정부의 야만적인 교사 대학살과 전교조 탄압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투쟁 작업장들과 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G20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조명지



대학에서 G20 회의의 운동 건설하기

부산대 · 이화여대 · 인하대 · 국민대 · 한국외국어대에서 G20에 항의하는 모임들이 건설됐다. 학생회, ‘대학생다함께’ 등 좌파, 개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모임들은 G20의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생회 간식 배포 부스 옆에서 G20을 폭로하는 리플릿을 나눠 줬다. ‘G20 바로 알기’ 인하대 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G20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만화 리플릿을 만들어 나눠

줬다.

또, 더 많은 학생들에게 G20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공개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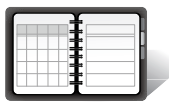
G20에 항의하는 모임들에 포함돼 있지 않은 학생회들에게도 강연회 공동 주최와 후원을 제안했다. 인하대에서는 ‘G20 바로 알기’ 인하대 운동본부’의 제안을 중앙운영위원회가 수용해 강연회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부산대 총학생회도 강연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부산지하철노동조

합은 이 강연회의 홍보 리플릿 비용을 후원해 줬다.

대학에서는 곧 학생회 선거가 시작된다. 그래서 선본들에게 G20에 항의하는 입장 발표와 집회 참가를 제안할 계획이다. 학생회 선거 시기에 주요 선본들이 G20에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그리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고 동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세란



G20 회의의 운동 다이어리

11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G20 대응 공동행동주간이다.

11월 8~10일 서강대에서 서울 국제민중회의가 개최되는데, 11월 9일 저녁 7시에는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등 급진 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G20과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그리고 좌파적 대안’이라는 포럼을 개최한다.

G20 규탄이 핵심 기조 중 하나

로 포함된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장은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의 규탄 집회에서 “G20 정상회의는 반민중적 회의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가 파탄에 이르는 것이 민중에 도움이 된다”며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와 11일 국제민중행동의 날 참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가 방해해도 서울시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은 11월 11일 오후 3시에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 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 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거리 행진을 할 것이다.

긴축도,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도 위기 해결책 아니다

경제 위기로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이미 위기를 겪은 그리스 · 스페인뿐 아니라 독일 · 프랑스 · 영국 등 유럽 각국이 재정긴축에 나섰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60세 정년을 62세로 늦추고 연금 전액 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지난 10월 20일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긴축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50만 명을 줄이고,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며, 육아수당 등을 줄여 8백10억 파운드(약 1백45조 원)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북유럽 복지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도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가족 수당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긴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 국가들의 긴축재정을 보면 이것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계급전쟁의 선포’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구제금융으로 은행들을 보호하고 보조금으로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 주느라 늘어난 재정적자를,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임금 · 일자리 · 복지를 삭감해 메우려는 것이다.

경고

그러나 이런 긴축재정이 자본주의 경제를 살린다는 보장도 없다. 유럽 각국의 긴축재정을 지지한 IMF조차 긴축재정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경제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지배자들도 경제 위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긴축재정에 분명하게 합의하지 못했고, 최근에 미국 · 일본 등은 통화 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고 나서고 있다.

최근에 이런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 곳이 영국 정부다. 영국 정부는 대대적인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한 나흘 뒤에 2천억 파운드(약 3백57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물론 세계 지배자들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아니라 부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2008년 위기 직후 세계 각국 정부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은행 · 기업의 이윤을 지켜 줬지만 노동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일자리를 잃고, 임금 · 복지가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위기 직후에 금리를 낮춰 금융기관에 돈을 파주고, 4대강 사업과 선박 펀드 등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계 지원으로 자동차 · 주택 판매를 늘린 것도 세금으로 기업 이윤을 지원한 것이었다.

반대로 쌍용차 투쟁에서 보듯 경기부양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실직임금은 삭감됐다.

이 때문에 지배자들의 경기부양책은 기업의 손실을 사회화하는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이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긴축정책이나 경기부양책이나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져야 한다는 데 세계 지배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우리의 생활수준과 일자리를 지키려면 G20 정상회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부자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공기업화해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부도 기업은 공기업화해 일자리를 지키고,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강동훈

G20 회의에 소극적인 한대련 지도부 유감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지도부는 G20 정상회의에 맞선 투쟁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한대련은 8월 말에 발표한 올해 하반기 계획에서 G20 회의의 투쟁 계획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G20 서울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각 대학에서 G20의 실체를 폭로하고 회의의 움직임을 조직하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진적인 학생들이 G20 회의의 투쟁에 대거 참가한다면, 전체 운동에 큰 자극을 줄 것이다. 특히,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중요한 일정인 11월 회의의 시위가 평일 낮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

동 규율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는 게 회의 행동의 규모를 키우는 데서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학생운동에서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인 한대련이 전 세계의 지배자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에 맞서 회의의 운동을 건설하는 데 소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G20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세계 민중에게 전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는 동맹들의 회의체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한 G20 참가국들은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참가해 왔으며, G20 정상회의는 ‘테러와의 전쟁’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또한 ‘테러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및 건전성 기준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란과 북한을 압박한 바도 있다.

따라서 한대련이 제국주의 세계 질서에 저항하는 반(反)제국주의 노선을 지지한다면, 당연히 G20 정상회의에 맞선 회의의 운동 건설에 진지하게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중국과 미국이 환율 등 문제로 갈등을 빚는데, 한대련 지도부는 이것이 “조강대국 G-2 탄생”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중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듯하다. 그래서 중국이 포함된 G20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어렵

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티벳 등에서 억압을 자행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다. 또한, 반제국주의를 ‘반미’로만 한정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한대련 지도부가 하반기에 열의를 보인 등록금 투쟁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등은 모두 이명박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 고통전가를 가속화하려는 의도와 충돌한다. 따라서 한대련이 주력하는 운동들을 G20 회의의 운동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한대련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G20 회의의 운동 건설에 나서길 바란다.

김영익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를 말하다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연대에 나선 정규직 박성락 동지는 최근 현대차 대의원선거에서 '파견 철폐, 정규직 쟁취'를 내걸고 당선됐다.

“사내하청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말은 이제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반가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된다는 것 자체에 마음이 설레었고, 하나의 희망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급속노조, 지회, 법률원 담당자들이 순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멸시받았던 삶을 이제는 벗어던지자는 마음으로, 많은 비정규직 동지들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자본은 불법 흔적을 없애려고 온갖 수를 썼습니다. 생산라인 공정마다 ‘현대차’ 이름으로 걸렸던 작업지시서를 떼어내고, 비정규직지회의 조합비 일괄 공제를 거부하기도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진행된 조합원 교육마저 막아섰습니다.



사진 제공 (울산노조) 박성락

그러나 우리는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과 함께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활동가들은] 현장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현장에서부터 노동자가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것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은 아침 출근도 함께하고 노동도 함께하고 밥도 함께 먹고 퇴근도 함께합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합시다.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08년 5월에 입사한 비정규직 박기홍 동지는 최근 집단적인 노조 가입 캠페인 때 조합원이 됐으며, 2공장 투싼 단종으로 해고돼 동료 25명과 함께 복직 투쟁하고 있다.

“지금 현장에선 뭔가 해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측이 노조 회의실을 봉쇄했는데도 1공장이나 시트사업부는 봉쇄를 뚫고 교육을 진행했고, 다른 공장 조합원들도 교육장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2공장에서는 협력업체 ‘바지 사장’들이 소장을 압박해 30일 서울 비정규직 대회 상경 인원을 파악하고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트사업부는 점심시간에 식당 홍보전을 했는데 정규직 동지들이 상경 투쟁 잘 하고 오라며 격려하고 후원금도 줬다고 들었습니다.

1공장은 점심시간에 정규직 활동가들과 함께 1백8배를 하면서 30일 상경 집회 참가와 특근거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관리자를 동원해 30일 특근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생산에 일



사진 제공 (울산노조) 박기홍

정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비정규직이 힘을 합쳐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야 합니다.

사측은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을 이용해 정규직의 임금 인상이나 고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게도 불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 동지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함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하면 수많은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정규직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사진 제공 (시애틀노조) 10월 27일 현대차 전주공장 앞 출근 투쟁

학교비정규직노조

“진보교육감이 생긴 지금 뭔가 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영선 경기학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레프트21>에 진보교육감 당선 후 생긴 변화를 말한다.

“경기도엔 4만7천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거죠.

대부분 2007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열악한 처지는 여전합니다. 특히 조리종사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고, 근무여건도 열악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노조에 가입해 근로조건을 바꾼 전남 사례는 반가웠죠.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출범식에 갔더니, 모두 너무 신이 났더라고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규직화도 반드시 해내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영향이 전국으로 퍼졌습시다. 그동안 ‘되겠어?’ 하고 생각한 노동자들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6개 지역에 진보교육감이 생긴 지금 뭔가 해야 한다는 요



사진 제공 (노동자세계) 이영진

전남처럼 다른 지역의 진보교육감들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가 생겼죠.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단’(이하 사업단)도 꾸려졌어요.

사업단은 학교를 방문해 리플릿도 나눠 주며 발로 뛰고 있어요. 김상곤 교육감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차원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어요.

전교조 경기지부와 공무원노조 경기 교육청지부도 사업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정말 놀라운 게, 직접 노조 가입서를 받

아 팩스로 보내주는 교사들도 있어요. 오늘도 한 교사가 가입원서를 보내면서 내일은 옆 학교에 가겠다고 하더라구요.

전교조 교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니 정말 힘이 나요.

사실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했을 때, 조금 나아진 것은 있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실망했어요.

그래도 얼마 전 간담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죠.

노동자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해요. 15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는 전국노조도 필요하죠.

이명박 정부가 모든 것을 ‘역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했잖아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15만 명이 요구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인숙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과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전주, 아산)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비정규직 3지회는 10월 30일에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사측의 탄압도 만만찮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려고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고, 특근 거부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10월 30일 대체인력 투입을 위해 이날 하루만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폼수’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상경투쟁과 특근 거부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탄압에 맞서 물심양면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특히 모범적인 연대로 비정규직 우선하고 시도를 막아낸 울산 1공장의 사례를 다른 공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투쟁을 건설한 정규직 활동가들이 정규직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대의원에 당선한 것은 연대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상경 투쟁 후원금을 전달한 것도 좋은 사례다.

1사 1노조

정규직노조 이경훈 지도부는 사측의 탄압에 맞선 항의를 조직해야 한다. 더불어 10월 30일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면 노동자들에게 더 큰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조 통합도 추진해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지금 상황이 통합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다. 김형우 급속노조 부위원장의 주장처럼 “대법원 판결은 1사1노조를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조 통합까지 추진한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편하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불법파견 투쟁에도 탄력을 줄 것이다.

현대차노조는 이미 1사1노조를 기본 방침으로 갖고 있고, 이경훈 지부장 자신이 1사1노조를 공약한 바 있다. 비정규직과의 단결은 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를 저지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다.

일부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투쟁에 적극적인 이경훈 지도부 때문에 비정규직의 독자적 투쟁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정서다. 4만여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결은 사측을 굴복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규직의 투쟁력과 연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산공장에서 사측의 비정규직 탄압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 정규직 연대의 중요성은 더 분명해진다.

지금 현대차 사측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이다. 우리는 사측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급속노조 이재인 교섭실장의 주장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정규직을 최대한 설득해서 비정규직 투쟁을 뒷받침해야 한다.”

모승훈

위키리크스 폭로

학살과 고문으로 점철된 이라크 전쟁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수많은 미군 문서들은 미국·영국과 이라크의 친점령 세력들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끔찍한 학살, 고문과 만행을 보여 준다.

위키리크스 웹사이트는 미군의 학살과 만행, 점령군이 부추긴 격렬한 종파간 갈등을 기록한 육군 보고서 40만 건을 공개했다.

보고서들의 날짜는 2004년 1월에서 2010년 1월에 걸쳐 있다. 이 문서들은 경찰, 군인, 교도관, 국경수비대가 저지른 고문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젊은 남성들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성폭력을 포함해 여성들이 학대 당하거나 장애인과 노인이 희생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보고서들은 이라크군이 학대 행위를 할 때 미군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거나, 그 사실이 미군에게 보고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들에는 곱질을 벗긴 전선과 배터리, 호스가 자주 등장한다. 죄수들은 발로 차이고, 얻어맞고, 성적 학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불과 화학 물질에 피부가 타고, 고통스러운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 받았다.

피부가 타고

2004년 6월 미국 정부는 고문이 광범하게 저질러진다는 것을 알고도 ‘프라고 242’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미국과 그 동맹들이 희생자가 아닌 이상 전쟁법을 어긴 사례를 조사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명령은 이라크인이 다른 이라크인을 학대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최초 보고서만 작성하고 … 본부의 명령이 없는 한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예컨대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담은 영상을 묘사한다. “이라크 병사 열 명이 서로 말하고 있고 두 명의 병사가 한 죄수를 붙들고 있다.

“그 죄수의 손은 묶여 있다. 영상은 이라크 육군 병사들이 죄수를 강제로 땅바닥에 눕히고 사살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사실, 미군이나 영국군 병사가 똑같은



포박당한 이라크인들 이라크에서 전기 드릴, 불과 화학물질을 이용한 민간인 고문과 무차별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짓을 저질러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점령의 역사는 은혜와 부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폭로된 보고서들은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실제 민간인 사망자수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의학전문지 《랜싯》의 조사를 보면, 이라크인 1백만 명 이상이 죽었다. 침략과 점령은 수백만 명을 난민으로 만들었다.

일부 사건들은 대단히 상세히 기록돼 있다. 예컨대,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폭발물을 수송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한 트럭을 뒤쫓고 있었다.

이 트럭에 타고 있던 남자 두 명은 차

밖으로 나와 투항 의사를 밝혔다.

아파치 조종사들은 무전으로 본부에 연락했고, 본부의 변호사는 “항공기에 투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미사일을 발사해 두 명을 죽였고 주변의 민간인이 다쳤다.

위협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 미군 심문자들은 죄수에게 입을 열지 않으면 ‘늑대 여단’에 넘기겠다고 위협했다.

이라크인 죄수들은 ‘늑대 여단’이 전기 드릴로 죄수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용의자들을 즉결 처분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늑대 여단’은 미군이 설립해 미군 대령 제임스 스틸이 운영했다. 스틸은 1980년대 엘살바도르에서 좌파와 양민을 학살한 암살단의 자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보고서들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목적이 이라크 해방이 아니라 미국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시안 러덕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번역 김용욱

아프가니스탄 오바마의 작전이 실패하고 있다

검토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부터 중앙아시아에 미군이 주둔하도록 허락했고, 탈레반이 나토군 보급로를 차단하자 국경지역을 열어 주며 나토군에 협력해 왔다.

최대 규모

오바마는 집권 초기 5만 명이 넘는 미군을 증파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자 오바마는 올 12월 아프가니스탄 전쟁 재평가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는 이 기간에 탈레반의 영향력을 잠재우고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고 9월 초부터 칸다하르에서 최대 규모의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군과 연합군의 공습 횟수가 50퍼센트 증가했다. 미 국방

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직접 나서 항공모함 링컨호를 파키스탄 연안에 투입했다.

지난 2월 탈레반 소탕 작전에 실패한 미군과 연합군은 이번에는 철저히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군은 칸다하르 대공세를 피해 파키스탄으로 국경을 넘는 탈레반을 공격하려고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대한 무인 공습을 강화하고, 탈레반 지도자들의 현상금을 높였으나, ‘아프파’ 전쟁 때문에 삶이 파괴된 파키스탄인들은 미군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르자이는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탈레반은 모든 외국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화협상안은 탈레반을 분열시키기 위한 술책이라는 지적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카르자이가 탈레반이 폭력 행위를 그만두고 아프가니스탄 헌법을 받아들이면 화해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탈레반은 여전히 자신감이 높고, 미군과 연합군의 만행 때문에 탈레반 지지 세력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탈레반이 양보하며 평화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다. 탈레반은 평화협상을 추진할 평화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발표된 날 동부 가즈니 주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했다.

따라서 민간인 희생만 날고 있는 최악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아프가니스탄인들 다수가 원하는 대로 모든 외국군이 즉각 철군해야 한다.

김덕엽 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할 의지도 근거도 없다. 애초에 한국의 자본가들이 한미FTA로 얻으려 한 핵심 효과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시장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위해 자동차 관세 문제에서 양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미FTA 체결을 위해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와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게다가 자국민에게 그토록 안전하다고 홍보한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수입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한미FTA 저지 범국민이 ‘재협상 반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현행 한미FTA 협정이 될 나쁜 것이라는 차악 논

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열우당 한미FTA 특별위원장을 지냈던 송영길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체결한 한미FTA 합의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대표가 된 손학규도 비슷한 논리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자동차 ‘재협상 반대’는 한국 노동자들이 한국 자본가와 미국 자본가 사이에서 한국 자본가를 편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한미FTA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한국 노동자들과 미국 노동자들의 단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고려

한미FTA 저지 범국민 내의 주요 단체인 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정부의 재협상을 반대하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월 24일 보신각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고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미 국회 외통위까지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한미FTA 협정을 무효화하려면 민주당과의 연대도 “세심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기존의 ‘한미FTA 폐기’ 요구는 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저지할 힘이 거리가 아니라 국회에 있

다는 현실론으로 이런 후퇴를 합리화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지방선거 이래로 본격화한 반MB 민주연합 논리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면 재협상”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에 한미FTA를 추진한

당사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한 재협상 촉구 서한의 내용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하고 두루뭇술한 표현들로 채워져 있을 뿐 핵심 문제들은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 재협상파의 주장 즉, ‘일부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이 유일한 실현가능한 목표라는 식의 주장은 이미 한미FTA 반대 운동 내 일부 개혁주의자들이 제기했다가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편에게는 “전면 재협상”이 “사실상 폐기”를 뜻한다고 말하고 민주당에게는 그것이 “이명박식 재협상 반대”를 뜻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술이 아니라 책략일 뿐이다. 그것도 나쁜 책략이다. 민주당은 “전면 재협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인 반면, 우리편 사이에서는 분란과 혼란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은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장호중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11월 8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리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참가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반MB 선거연합 비판을 되새겨야

지난 10월 17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대회의 주요 쟁점은 6·2 지방선거 평가였다.

논쟁은 ‘오석순 비례후보 선본 평가서’를 자료집에서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두고 벌어졌다. 오석순 동지는 기룡전자 조합원으로 6년째 투쟁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투사다.

오석순 비례후보 선본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선거 활동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평가서를 제출했다. 오석순 선본의 평가서는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반MB 민주연합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폭로했다.

“[6·2 지방선거는] 자수와 평등을 나아가 반제·반자본의 진보변혁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동거라는 정말 찻찻하고 속이 상한 선거였다”,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자기당 후보 앞에서 시장 위원장과 시장 후보가 남의 당 선거운동원으로 열변을 토하는 기이한 사태는 민주노동당의 자화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오석순 후보는 민주노동 후보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진보정당 분열의 최대 피해자, 민주노동의 무력과 관료적 경향에 의한 최대 피해자, 민주노동당 반MB 전략에 최대 피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오석순 민주노동당 비례후보는 민주대연합 전략을 통렬히 비판했다.

를 감수한 서울지역 선거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서울시당은 오석순 선본의 물음에 진지하게 답해야 했다. 그것은 진보정당의 분열과 반MB 민주 연합에 실망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당은 핵심적 물음에 대답을 회피한 채 모호한 평가를 내놔다.

나는 얼마 전 김소연 기룡전자 분회장을 만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민주당의 한계는 모두가 알아요. 민주당이 비정규직법을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진보정당 만들자

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생각이 희석된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흡수지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후보로 나왔는데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느라) 여기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고 말했다.

나는 김소연 분회장의 말을 들으며 민주당이 만든 비정규직법으로 고통받았던 이랜드 노동자, KTX 승무원 등을 떠올렸다. 민주노동당은 더는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느라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염원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조명지

법원노조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원행정처

최근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다. 이미 기존 예규로 법원 노조의 성명서를 문제 삼았고, 신문 기사 게시까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자진 삭제 압력을 가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이 강제로 수정·삭제했다. 이젠 그 예규를 규칙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예고된 규칙안을 보면 기존 예규에 있는 제한 조항에 더해 해직 노동자와 노동·시민단체의 글도 못 올리게 하려 한다. 또, 업무와 무관한 글들이 대다수인 코트넷 자유게시판조차 막아버리려 한다.

연구모임에 대해서도 “구성 또는 운영이 현저히 폐쇄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목적이나 활동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경우” 등을 들어 커뮤니티 기능 이용을 불허하겠다고 하는데 이토록 자의적인 기준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규칙안의 가장 악의적인 조항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계 위협으로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본보기로 몇 명 징계해 입을 꾹매 놓겠다는 것이다. 10인 이내의 코트넷 운영위

원은 모두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자들이니 자신들이 사법부 내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10월 21일 대법관 회의에 상정·통과될 예정이던 이 규칙안은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원노조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 조합원들에게 상정 반대를 선동하며 저항한 결과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월부터 시작되는 법원본부장 선거 운동기간을 노려 재상정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양윤석 법원 노동자

학생인권조례 무력화하려는 초·중·고교육법 개악 반대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나는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광노현 교육감의 서한문을 학생들에게 나눠 줬다.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에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학교에서는 체벌 대안 프로그램을 정하기 위한 설문지가 돌아왔다. 체벌 대안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학부모 회의도 열린다.

물론 몇몇 교사들의 굵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더디게나마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자, 교과부가 상위법을 개악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개악 법안을 보면 ‘학생의 권리 행사



초·중·고교육법 개악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는 교육목적과 배치되는 안 되며 …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 학교장 마음대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고 하지만, 그럼 기합은 인정되는

건가? 이러한 모호한 조항들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학생의 권리 신장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는 것도 강조돼야 한다”며 “학교를 거리로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교내 집회를 금지하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긴다는 논리다. 학생들에게 쥐꼬리만 한 자율도 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자로 켜 둔 제한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에서는 어떠한 책임의식도 건강한 사회적 역량도 배우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초·중·고교육법 개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심효빈

G20 반대 막으려고 <레프트21> 거리 판매자들을 위협하는 경찰

나는 동료들과 함께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통해 G20의 실체를 폭로하고, G20 항의 행동을 함께하자는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2주 전쯤 신촌역 거리 판매대에 정복 경찰 다섯 명이 찾아와 “집회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점으라”고 협박했다. 같은 날 홍대입구역에서도 경찰들이 가판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 거리 판매를 굳이 집회 신고까지 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들은 그 다음 주에 홍대입구역 가판을 끝낸 회원들을 따라와 가판 집을 검열하겠다고 붙잡았다. 그들은 집회신고서를 보고 결국 돌아갔지만, 이를 뒤에 마포 경찰서 형사로부터 가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 왔다. 내가 “집회 신고까지 했고, 우리가 당연

히 누릴 권리”라고 대답하자, 형사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까요? G20 리플릿 뿌리지 마세요!” 하고 말했다.

지난 5월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시민 6명을 연행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기를 비판하는 내용 때문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결국 그들이 문제 삼고 싶었던 것은 바로 G20에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이었다. 홍대입구역 도로변에는 G20 콘서트를 홍보하는 깃발들이 줄줄이 나부끼고 있는데, 왜 G20에 반대하자는 주장은 거리에서 하면 안 되는가?

나는 경찰들의 이런 반응이야말로, G20 반대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레프트21> 거리 판매의 의의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G20 반대 행동을 호소할 것이다.

소은하

북한에서 아래로부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북한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외국 군대나 북한 정권의 ‘개혁 개방’이 아닌 오직 아래로부터 변화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 바로 북한에서 ‘아래로부터 변화’가 가능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다.

언뜻 보면 북한에서는 어떠한 대중투쟁도 불가능해 보인다.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대략 주민 10명 당 1명 꼴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비밀 요원이 있다고 한다. 또, 요덕 수용소 등에는 수많은 ‘정치범’이 수용돼 있다. 게다가 북한은 소위 ‘동구권’의 붕괴에도 여전히 견제하지 않은가.

하지만 만일 북한에서 어떠한 대중투쟁 가능성도 없다면 대체 왜 10명 당 1명씩 보위부 요원이 있고, 노동교화소 등 강제 수용소가 필요하겠는가? 북한에는 남한에서처럼 가시적인 대중투쟁은 없지만 소극적인 저항(탈북이나 태업 등)은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투쟁의 잠재력도 있다.

하지만 잠재력이 있다는 것과 대중투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대부분 회사를 짜증나는 곳으로 생각하고 관리자들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동자들이 항상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불만은 대중투쟁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불만이라는 불꽃을 계급투쟁의 들판에 붙이는 바람

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과연 무엇이 북한 노동계급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바로 중국의 노동자 투쟁이다. 북한과 억압의 정도가 대동소이했던 루마니아에서 노동자들은 인근 동유럽 국가들의 노동자 투쟁으로 스탈린주의 정권이 붕괴한 것에 자신감을 얻어 차우세스쿠 정권을 타도했다. 따라서 중국의 노동자 투쟁과 저항적인 분위기가 북한으로 유입된다면 북한 노동계급은 충분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전투적으로 변하고 수많은 저항을 하는 것을 보면, 중국 노동계급의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성이 계속 커지고 있으므로 북한 노동계급이 중국 노동계급에게 자신감을 이전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가 파탄지경이기 때문에 북한 관료들이 향후 경제발전 정책을 놓고 군사비 투자를 결코 줄일 수 없다는 보수파와 군사비 투자를 줄이고 노동계급 생활 수준을 올리자는 개혁파 관료들로 분열해 갈등할 수 있다.

즉, 경제·정치적 위기로 인해 지배관료들 사이에 생긴 분열과 갈등을 뚫고, 중국 노동계급의 자신감을 이전받은 북한 노동계급의 불만이 솟아오르면 북한에서의 ‘아래로부터 변화’는 가능하다.

한영민

발전노조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다

지난 5월 5개 전력회사 사업본부는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발전노조는 단체협상을 쟁취하려고 60일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다. ‘다함께’ 서울 남부지구 회원들은 노동자들을 응원하려고 농성장을 방문했다. 사측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관철하려고 노조탄압에 들어갔고 그 사전 공격으로 노조와 맺은 기존 단체협약을 파기했다.

현재 발전노조는 노동조건 후퇴 없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코엑스 근처 한전 본사에 있는 농성장도 철거하려고 한다. 정부가 G20을 앞두고 코엑스 인근을 ‘준계엄 상태’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발전노조 박종욱 위원장은 “이 농성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단체 해지 이후 사측이 내놓은 안들은 개약안으로 가득 차 있다. 사측은 노동조합과 합의해 처리해 왔던 전환배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구조조정을 더 쉽게 하려는 의도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조합원 범위를 축소하고 노조 전임자수와 조합 활동 시간을 턱없이 제한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박 위원장은 “바뀐 타임오프제를 따르더라도 노조전임자 수가 13명에서 25명으로 늘어야 하는데 사측은 법도 무시하고 8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일

정부 홍보가 보여 주지 않는 G20의 진정한 실체



이명박 정부는 왜 G20 성공에 목을 매는가

이명박 정부는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효과가 '국적 높이기'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 정부들과 자본가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 자본가들을 좋은 파트너로 여기도록 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려면 경쟁하는 열강들과 대자본가들이 대부분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이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갈수록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세계시장을 고려하면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의장을 한 번 맡는다고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국내에서 대부분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왔다. 4대강 사업, 언론 통제, 반민주적 탄압,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등, 세습지 무산이 보여 주듯 제대로 성공한 정책도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과제 즉, 모든 국민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대중이 받아들일게 할 수 있다면 이런 국내 갈등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고 위신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많은 정부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려고 애쓰는 까닭이다.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국민적'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한 정부의 국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운동을 공격하기는 쉬워질 것이다.

한편 한국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국제 시장에 내다파는 상품들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고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사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국제회의의 유치 따위로 해소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주장은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논리로 이용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도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용된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국 자본가들이 혼잡처럼 달고 싶어 하는 '국적'은 노동자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명박은 G20을 세계의 주요 지배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제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민중에게 강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지 않는가

2008년부터 전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경제 위기의 핵심적 성격 중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확산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주요 경제권 사이에 경쟁적이지만 상호의존적인 성격이 강화된 결과다. 따라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국적 공조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최초로 개최됐을 때 참가국과 주류 언론들은 이 모임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국제적 대책을 내놓기 위해 모였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그러나 각 나라가 각자 이익에 맞게 내놓은 대책 외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못한 2008년 11월 워싱턴과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부터, 각국이 해관계의 불일치로 금융 개혁이 용두사미로 전락한 2009년 11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와 2010년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를 거쳐, 최근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의를 불사른 '환율전쟁'에 이르기까지 G20은 전혀 국제 협력의 공간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체제, 즉 자본주의가 경쟁적 체제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을 '서로 싸우는 형제들'이라 불렀다. 특히, 경제 위기 때 각 나라 정부들은 다른 나라 자원을 희생해 자국 자원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더 힘들어진다.

물론, 자본가들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정상들이 모든 점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의 말을 봐도, 그들은 '형제'이기도 하다.

그들은 2008년부터 각종 정점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자본가가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이 치르게 만들자는 것에는 합의했다.

G20은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은행을 살리는 것에 몰두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뒤흔전으로 미뤘고, 이 과정에서 생겨난 막대한 국가 부채를 공공서비스와 노동자 임금 삭감 등 이른바 '하리매 줄라매 기'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막심 높은 IMF에 그토록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다.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뿐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처럼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국제 공조·합의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G20이 금융 규제로 가고 있는가

최근 '환율전쟁'이 벌어지며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무산됐던 금융 규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을 비롯한 몇몇 진보 단체들도 G20 정상회의가 금융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금융 통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각국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타국에 전가하고 싶어 해 금융 규제가 G20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표적인 금융 규제 방안인 은행제는 지난 G20 회의에서 캐나다와 일본, 호주, 브라질 등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자국의 금융산업을 더 키우고 싶어 하는 이 나라들은 은행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면 자국 금융 기관으로 자금을 모을 수 없을까 봐 걱정한다.

도입된 몇몇 규제조차 금융기관들의 반발로 폐지되자했다. 미국에서 거대 은행에 세금을 물리는 '오바마세' 도입은 은행들의 반발로 실패했고, 헤지펀드·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에 은행이 투자하지 못하게 하려던 것도 일정 한도까지는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영국은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법인세를 28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낮출 예정이어서 영국의 주요 은행들이 내야 할 세금이 되레 줄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천기잡추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조차 "지난 3년간 영국 중앙은행이 영국의 금융기관에 지급한 보조금만 5백90억 파운드(약 1백50조 원)에 이른다"며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년의 1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국 주요 은행들은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면 영국을 떠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더 근본에서는 금융 규제로 금융 불안정성이나 경제 위기를 막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규제를 요리조리 피하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해 왔고, 앞으로도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분야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게다가 금융의 무제한 자유는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구실을 했을 뿐 그 자체가 근본 원인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지적한 것처럼 실물 부문의 이용을 허락으로 투자자를 찾지 못한 막대한 자금이 투기에 뛰어들어 금융 위기가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이론 생산이라는 엔지 자체를 전도하지 않고 금융 규제만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반대 시위

G20 반대보다 그 안에서 요구하는 게 더 효과적?

주요 NGO 단체들은 G20에 반대만 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홀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측이 공동 주최한 '시민사회 G20 정책 대화'(Civil G20 Dialogue)가 열렸다.

그러나 G20에 권고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열린 그 포럼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 측은 NGO들의 권고를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나 NGO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사실 G20은 모든 회의가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비민주적인 회의의 구조를 갖고 있다. 참관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G20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주장은 합의 운동을 G20의 틀리기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정부에게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10월 20일 열린 정부와의 정점토론회에서 G20 정부준비위 관계자는 'Civil G20 Dialogue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수렴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운동 건설보다 정부와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시민사회단체의 G20 로비 활동은 G20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주고 합의 운동의 힘을 분산시킬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G20에 비판적으로 개입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전략 때문에 일부 NGO는 G20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체의 이름에 '합의'를 넣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G20 정상들이 우리의 주장을 듣지 않을 수 없게 강제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G20 합의 운동의 규모를 키워 우리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는 늘 저항을 부른다

G20 정상회의 합의 운동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는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 때였다. 당시 노동조합, NGO, 급진좌파 정당, 환경 운동가, 반전 활동가 등 1백50개 단체가 연합해 '사람이 최우선이다!'를 결성해서 정상회의에 대응했다.

주요 슬로건은 '너희들의 위기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였다. 3만 5천여 명이 하이드파크에 모였다. 영국 중앙은행 앞에서 "금융 만우절"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큰 규모로 열렸고 영국 전쟁저지연합은 트라팔가 광장에서 행진을 하고 시위를 벌였다. 기후변화 관련 활동가들도 그즈음 '기후캠프'를 조직했다. 이들은 "서민들이 아니라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부유층이 (경제 위기 대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는 단지 영국에서만 열린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 집결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묻고 빈곤 해결과 일자리 보호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009년 11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에는 학생과 시민들 4천여 명이 평화행진을 벌였다. 기후변화 운동에 관여하는 활동가들이 피츠버그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교각에 대항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2010년 6월 캐나다 정상회의 때에도 합의 운동은 계속됐다. 2만 5천 명이 캐나다 토론토 G20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캐나다의 풀뿌리단체들을 아우르는 캐나다공동체동원네트워크가 합의 운동을 주관했다.

이제 서울시 합의 운동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다.

G20 대국민 토론회 'G20 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

G20의 성격과 운동의 방향을 토론하다

10월 26일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G20 대국민 토론회 'G20 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가 개최됐다. 평일 저녁임에도 토론회장은 가득 찼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박석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 세 명의 연사는 입을 모아 G20과 이명박의 자화자찬을 비판했다.

첫 연사인 박석은 대표는 특히 경주 G20 재무장관 '성파'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과대 선전과 포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재 덕분에 "환율전쟁"이 종식됐다고 홍보하지만 "환율 분쟁이나 경상수지 불균형은 모호한 약속"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IMF 개혁' 운운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거부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IMF 개혁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실장은 정부의 G20 경제 효과 부풀리기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G20 서울정상회의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비싼 1박 2일"이 될 것이고 "G20의 직접적 효과는 노동상과 이주노동자 탄압,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허영구 대표는 금융 자본이 얼마나 해악적이며 한국에서 투기자본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하면서 G20이 "환율 문제에 매달리면서 금융 규제를 뒤흔전으로" 미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석은 대표는 투기자본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하면서 G20이 "환율 문제에 매달리면서 금융 규제를 뒤흔전으로" 미쳤다고 비판했다.

초점

그러나 연사들 사이에는 G20 정상회담의 성격과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 반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입장 차이도 있었다.

예컨대, G20 정상회의의 성격에 관해 박석은 대표는 G20 서울 정상회담은 "사기", "팔장치"이고 "점심 밥값만 측내는 회의"에 불과하다 비판하면서 한미FTA가 "더 본질적 요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우석균 실장은 국제적 경기 부양, 금융 개혁, 환율 등 중요한 정점에서 정상회의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측면을 인정하면서 "부자들에게 퍼주기"에 합의한 점, 그 때문에 형성된 국가 부채를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물리는 데 합의한 점, IMF와 세계은행, WTO 등 국제 불발의 기구들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 점 등 중요한 합의가 있었고 이것에 반대하는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중 토론에서는 G20의 성격과 합의 운동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에 대해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민주노총은 올해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반MB공투본'을 확대재편하는 방식의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이를 위해 억압을 강화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보진영의 광범한 단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상설연대체 제안은 이런 노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제안한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가 11월을 앞둔 현 시점까지도 제대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다들 '광범한 단결을 위한 상설연대체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만 지금 문제는 진정한 단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답하는 것이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지난 10월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상설연대체 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처음으로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토론회에 다함께를 대표해 발제자로 참가했던 나는 이날 참여하게 논쟁이 된 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설연대체가 진정한 단결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주장하려 한다.

개혁주의 정치가 낳은 문제

진보진영은 대략 2005년 말부터 2007년 1월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하기 전까지 상설연대체 건설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자주계열은 상이한 정치 조류(단체)가 모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보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민족 자주"와 "반미"를 고집해 다른 정치 경향들의 상설연대체 참가를 어렵게 했다.

결국 한국진보연대는 다함께를 비롯해 적잖은 좌파 단체들과 민주노총이 불참한 자주계열의 결집체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0월 19일 토론회에서 자주계열을 대표해 발제한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집행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조직 결정이 이러저러한 사정과 이유로 미뤄지더니 유아무야되는 과정을 보면서 실망과 안타까움이 컸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진지한 돌아보기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집행위원장은 "한국진보연대가 출범 때부터 반쪽짜리가 된 것은 대중조직 대 정치 단체 간의 분열"때문이라고 했다. 황당하게도 좌파 정치 단체들을 '분열주의'로 몰아세운 것이다.

나는 "대중조직 대 정치단체 간의 분열이 문제였다면 왜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한국진보연대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동전선 김대연 집행위원장은 "전국민중연대에서 한국진보연대로 바뀔 때 핵심은 자주계열의 전략 문제였다. 이를 얘기하지 않은 채, 마치 일부 정치 단체들이 발목을 잡았지만 대중조직이 결정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다" 하고 말했다.

자주계열은 자신들의 "민족 자주" 이데올로기를 연대체에 강요하려 한 것 때문에 한국진보연대가 최종 자주파의 재결집체로 돼 버렸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

자주계열의 좌파 민족주의 정치는 실상 개혁주의 정치다. 개혁주의 정치의 핵심 특징 하나는 체제 내 개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계급연합(동맹)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좌파 민족주의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민족적 과제'인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래서 이들은 '민족화합적' 자본



사진: 이원진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지지한 민주노동당 상설연대체는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떠받치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가들과 냉전적 자본가들을 구별한다.

가령, 죽은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은 '민족 자주'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인사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정주영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식칼 테러까지 서슴지 않았던 노동자의 적이다. 또, 자주계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6·15공동선언'의 주체였던 김대중도 협력해야 할 통일인사가 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밀어붙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고통받았던 노동계급에게 그는 적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김대중과 노무현을 경험한 민주노총 소속 선진 노동자들이 '민족 자주'의 관점에서 김대중·노무현과 함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중조직' 가운데 민주노총만 자주계열이 주도하는 한국진보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근본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이 '민족 자주'로 이데올로기를 상설연대체에 또다시 강요하려 든다면 새로운 상설연대체는 다시 한 번 한국진보연대의 재판(再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대연합

한편, 우려했던 대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상설연대체 건설 제안문에 "범민주 세력까지도 견인"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도 "반MB연대의 완성은 2012년 '진보적 민주연합정부' 수립"이라고 본다.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 연립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진: 제중 (김제성)

2007년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식.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이 '민족 자주' 이데올로기를 상설연대체에 강요하려 든다면 상설연대체는 한국진보연대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공유하는 이런 구상은 현재 민주노동당을 더욱 우경화시키고 있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의 박경순 부소장은 "[6.2지방선거를 통해]우리 당은 반MB연대를 선도[했다]... 운동권 정당의 탈을 벗어던지고 대중정치를 선도"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투쟁하는 진보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진보를 염원하는 대중은 투표와 투쟁을 통해 민주당의 영향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러나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구하려 애썼다. 진보적 강령을 내세워 대중의 신뢰를 획득한 뒤, 이 신뢰를 대부분 민주당에 헌납한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 추진한 비정규직 약법 제정, 이라크 파병, 한미FTA 등을 반성하고 태도를 바꾼 적이 없다. 그런데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상대방의 잘못은 뒤로 제쳐두고" 민주당과 연합을 위해 "10년 해 온 싸움도 미뤄둘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10월 19일 토론회에서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집행위원장은 "계급연합은 기층 대중조직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상설연대체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쟁점을 회피했다. 그러나 자주계열은 오래전부터 민주당과 하는 연합은 진보정당이 말고 대중투쟁은 상설연대체가 맡는다는 '양날개론'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반MB 민주연합과 상설연대체의 관계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부르주아 정당(민주당)과 동맹하는 정책은 우리 편 투쟁의 요구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할 뿐 아니라 투쟁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예컨대, 지난해 노무현 자살로 표면화된 반이명박 정서는 운동으로 발전해 6월 10일 10만 명이 모이는 범국민대회에서 정점에 올랐다. 그러자 민주당은 아래로부터의 격앙된 대중 정서에 부담을 느껴 숨 고르기에 들어갔고, NGO들과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당과 계급연합(인민전선)을 본격화해 운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명박은 반정부 운동이 민주당을 추수하는 개혁주의 세력의 통제 속에 가라앉자, 신속하게 언론약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어서 점거파업을 하던 쌍용차 노

동자들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당과 공조하면서 결정적 시점에 운동의 김을 빼고 통제하는 구실을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은 상설연대체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을 떠받치는 기구가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설연대체 추진은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사안별 연대체는 필요없는 것인가

10월 19일 토론회에서 또 다른 쟁점은 '사안별 연대체가 필요한가'였다. 한국진보연대를 대표해 발제한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공동대표는 "적지 않은 사안별 투쟁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한계는 명백했고, 그 한계가 상설연대체 논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한다"며 사안별 연대체가 문제인 양 주장했다.

이것은 사안별 연대체가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특히, 새로운 쟁점이 운동으로 떠오를 때)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전혀 보지 않는 태도다.

자주계열은 한국진보연대 건설 초기에도 사안별 연대체 난립과 무용론을 퍼다가 많은 비판에 직면해서 태도를 바꾼 바 있다.

"사안별 연대운동도 전선운동의 중요한 방식이다. 최근 평택미군기지반대투쟁, 파병반대투쟁, 한미FTA 저지투쟁, 비정규직철폐투쟁 등 중요한 투쟁은 어김없이 사안별 연대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그런데 이를 다 해소하고 하나의 상설적인 연대체로 통합하려 한다면 연대의 폭은 매우 협소해질 것이고 투쟁의 위력도 반감되고 말 것이다."(한국진보연대 10문10답 자료집)

수년 전에 제기했다가 철회한 사안별 연대체 무용론을 다시금 제기하는 것은 자주계열이 여전히 한국진보연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기 성찰적 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이 제안한 상설연대체 제안이 그동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단결을 이루고 대중투쟁을 건설할 수 있느냐는 위에 제기한 조건들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최영준

※ 기사 전문은 www.Jeff21.com을 보시오.

진보신당 새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진보 정치 단결 염원 수용해야

조승수 의원이 진보신당 새 대표가 됐다. 조승수 대표 체제의 등장은 ‘독자파’의 승리를 뜻한다.

진보신당 내 ‘연합파’는 “2012년 총선 전까지 통합 진보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독자파’는 “통합정당은 두고 봐야 할 문제고, 당 자체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 논쟁은 지방선거에서 심상정 전 의원이 유시민 지지를 위해 경기도지사 후보를 사퇴하면서 촉발됐다.

심 전 의원과 노회찬 전 대표 등 ‘연합파’는 진보신당의 홀로서기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1~2퍼센트대 지지율에 그치는 진보신당으로는 선거적 가망이 없다는 위기 의식이 강하다.

진보신당 창당의 주역들이 진보신당의 실패를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심 전 의원의 “대중적 진보 통합 정당”은 그 대상을 무원칙하게 넓혀놨다. 진보 정치 세력만이 아니라 친자본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도 포함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2012년에 민주당과 일대일의 경쟁·협상 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파’인 박용진 신임 부대표도 “민주개혁세력과도 선거연합을 할 수도 있다” 하고 말했다.

선거 중심주의

이들의 진보대통합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우선 계산하는 선거공학에 근거해 있다. 그래서 이들의 진보대통합 프로젝트에는 계급투쟁은 없고 내후년에 있을 선거 일정만 있다(이것은 민주노동당 내 일부 ‘진보대통합파’의 구성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이 노동자들에게 친자본주의 정당이 아닌 정치 대안을 광범하게 제시하려면 노동자 투쟁을 지원·고무하는 속에서 건설돼야 한다.

반대로, 조승수 새 대표는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은 ‘진보-자유-보수’의 3자 구도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진보대통합에도 부정적인 듯하다. “반신자유주의 정치 연합”의 형태가 “선거 연합, 정책 연합이 될지, 정당 통합이 될지는 이후 여러 진보 세력과의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는 태도다.

조 대표가 진보대통합에 부정적인 것은 심상정·노회찬의 선거 중심주의를 반대해서가 아니다.

조 대표는 진보신당 내에서도 좌파가 아니다. 오히려 우파에 가깝다. 조 대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 안에 기울어 있는 듯하다. 분당 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시절에 이미 노동계급 양보론인 사회연대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쌍용차 파업 때는 피켓팅 확대를 건설하기보다는 투쟁 중재에 주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회사(채권자)와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진보신당 내 좌파(당내 여론 조사에서 27.7퍼센트의 당원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가 지도부 선거에서 대안적 후보 출마는 고사하고 조승수 후보를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

심상정·노회찬과 조 대표의 핵심 차이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대하는 태도 문제다.

조 대표는 2008년 2월 1일 “현재의 틀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선도 탈당파’다.

얼마간 이질적인 ‘독자파’를 하나로 묶어 주는 것도 민주노동당을 대하는 거부감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사진 출처: 진보신당

“재벌과 싸우는 당”을 만들겠다는 조승수 대표가 경제 위기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지 않고 보험료 선제 인상 계획에 기우는 것은 유감이다.

철학과 가치가 다른 정당”이며 “앞으로는 가짜 진보와 맞장 떠야 할 시기”라는 김은주 신임 부대표의 말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독자파’의 정서를 잘 보여 준다.

조 대표를 포함해 ‘독자파’도 “진보대연합”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때 “진보대연합”은 선거 때 진보 선거연합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다. 진보신당이 총선에 독자 출마해 당선할 만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꽃감만 빼먹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법하다.

정창윤 전 진보신당 울산시장 대변인은 이런 “진보대연합은 정치적 수사”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로 당선되었음에도 당이 좀 불리하다고 단일화도 없이 완주를 고집했던 조[승수] 의원이 갑자기 진보대연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을 누가 진정성 있게 이해할 수 있겠나.”

따라서 조 대표의 “진보대연합”으로는 노동자들의 진보 정치 세력 단결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선거 때 반짝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연합이 아니라 진보정당들의 단단하고 지속적인 단결을 원한다.

물론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진보대통합을 놓고 연행이 다르다. 또,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유력한 정치도 민주연합을 더 중시하는 개혁주의다. 진보신당의 ‘독자파’가 특히 우려하는 자자파의 ‘패거리주의’도 미해결 상태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단결 염원보다 민주노동당과의 경쟁을 더 의식하는 듯한 진보신당 ‘독자파’의 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신당의 좌파는 노동자 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는 원칙 있는 진보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인식

문성근 씨의 ‘야권단일정당’론 비판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씨알이 안 먹”히는가?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야권단일정당 1백만 민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빼고 다 뭉치는 것 말고는 정권을 교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증오한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상상도 하기 싫어한다. 우리도 한나라당의 패배를 바란다.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정치 상황에 ‘열린 공간’이 생길 수 있고 대중의 자신감도 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이런 ‘열린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문 씨는 한나라당의 패배를 위해 진보정당을 해체하라고 요구한다.

“국민들 눈에는 박정희 가문이 있고, 다음에 김대중·노무현 ‘가문’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여론조사들에서 한나라당·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당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엇비슷하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대중의 정치적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아서’ 찍었다는 사람이 2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성장이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뤄졌다는 점

도 그 지표 중 하나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악의적으로 가로막곤 했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일심화’ 사건을 터뜨려 민주노동당을 공격했다.

역설이게도, 문 씨의 ‘야권단일정당’ 이야말로 민주당만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의 발로다.

결국 ‘야권단일정당’론은 진보정당들더러 해산하고 민주당 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다. 2012년판 민주당 수혈론이다.

차이

그는 “분단국가에서는 [진보정당에] 대체 씨알이 안 먹”힌다고 말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서구의 역사”일 뿐이라한다.

객관적 사실 1: 지난 지방선거에서만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합쳐 2백 17만 표를 얻었다. 투표자의 10퍼센트가 진보 양당에 투표했다.

객관적 사실 2: 진보정당의 집권은 “서구의 역사”만이 아니다. 남미의 브라질·베네수엘라·우루과이, 아프리카의 남아공 등에서 진보정당들이 집권했다. 이 나라들도 모두 독재정권의 폭압을 경험했다.

문 씨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차이를



사진 출처: (국민의)문성근

필요한 것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투쟁의 ‘민란’이다.

말의 차이쯤으로 몽겐다. “김대중·노무현 가문 중에 좀 센 말을 하는 분들이 민노당, 진보신당”이라는 게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충돌한 쟁점들 — 한미FTA, 노동자 구조조정, 파병 등 — 은 대부분 계급적 대립이었다. 두 당의 사회적 기반이 적대적이기 때문이었다 —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그래서 민주당의 핵심 문제는 “당원이 지구당위원장 하나 못 뽑는 구조”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려는 자본가 정당이다. 민주당의 집권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문 씨는 진보정당이 “빛과 소금”은 될지언정 집권 세력이 되기는 어렵다고 조소한다. 그야말로 단견이다.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사회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노동자 계급이 거대한 투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도래하면 진보정당의 집권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계급투쟁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보정당들은 사회적 평온기가 아니라 사회적 격돌이 첨예한 상황에서 집권했다.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던 2004년 총선도 노무현 탄핵에 반대하는 거대한 대중 투쟁을 배경으로 치러졌다.

마지치고 보면,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개혁주의 정치가 문 씨 같은 주장이 득세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반MB 민주연합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한테서 독립한 진보정당의 독자 성장 전망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다.

문 씨 같은 주장이 횡행하지 못하게 하려면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해야 한다.

김인식

‘국가고용전략 2020’

정부가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만 양산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과 강성노조가 “고용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저임금의 저질 일자리, 임시·단기 계약직을 늘리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파견근무, 2년 이상 비정규직 고용,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이명박의 선전포고다.

‘국가고용전략 2020’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세 가지 중요한 논점을 제기했다. 첫째는 고용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시장의 진정한 ‘이중구조’는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격차에 있다. 실제로 전체 노동자들의 소득 정도를 보여주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2006년 61.3퍼센트에서 2009년 60.6퍼센트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기업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대기업 28곳의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39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4배나 많은 보수를 챙겼다.

이중구조

이렇게 막대한 부를 빼앗아 간 기업주들을 제쳐 두고 정규직 노동자를 원형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태를 왜곡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공격을 지렛대 삼아, 전체 노동자의 처지를 끌어내리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한다. 노동운동 내에서 제기되는 ‘정규직 양보론’이 위험한 이유다.

진정 필요한 것은 전체 사회적 부에서 노동자의 몫을 확대하고, 정규직의 ‘고용·임금 경직성’을 전체 노동자들에게 확대하는 일이다.

둘째는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부는 기업주들의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자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노동시간 유연화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대에만 일조할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정규직 일자리 증가를 강제할 수 있다. 그래야 한쪽에선 야간노동과 잔업·특근에 시달리고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쟁점은 어디에서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다. 정부는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시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공기업 정원 축소를 폐기하고,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기업주들에게 제공하는 세금감면과 4대강 사업에 퍼붓는 돈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

노동운동은 ‘국가고용전략 2020’이라는 이명박의 대(對)노동계급 공세에 맞서 대중적 항의를 건설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지켜야 한다.

박설

전태일 분신 40주기

한국 노동자들의 영원한 등불

전태일이 10대를 보낸 1960년대는 박정희 정부가 급속한 공업화를 시작하던 때였다. 저곡가 정책 때문에 농촌이 파탄지경이 되면서 1960~1975년에 무려 7백만 명이 도시로 밀려들었다. 전태일도 1964년 상경해 구두닦이, 신문팔이로 연명하던 도시 빈민 중 한 명이었다.

전태일은 1965년 평화시장에서 ‘시다’ 생활을 시작했다. 하루 14시간 일하고 한 달 월급은 1천5백 원. 일당이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50원이었다.

당시 평화시장 일대는 나날이 성장했다. 업주들은 불과 1~2년 사이에 집도 사고 땅도 살 만큼 큰 돈을 벌었지만,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처참했다.

“종업원 대부분이 여자로서 평균 연령 19~20세 정도가 미성을 하는 사람들 이고, 14~18세가 시다를 하는 사람들일 세. 보통 아침 출근은 8시 반 정도. 퇴근은 오후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일세. … 그 많은 먼지 속에서 하루 14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네.”(1969년, 원섭이에게 보내는 편지)

전태일이 재단사로 일하던 어느 날 시다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재단사요, 난 이제 아무래도 바보가 되나 봐요. 사흘 밤이나 주사 맞고 일했더니 이제 눈이 침침해서 아무리 보려고 애써도 보이지도 않고 손이 마음대로 펴지지 않아요.”

질식할 듯 탁한 공기와 지저분하고 어두침침한 분위기. 한 평당 노동자 4명 정도가 일하는 작업 환경. 게다가 다락방에

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비좁은 작업장 사이를 걸어야 다녀야 했다.

어느 날 한 미싱사 소녀가 일을 하다가 새빨간 핏덩이를 재봉틀 위에다가 왈칵 토해냈다. 전태일이 급히 병원에 데려가 보니 치료가 어려운 폐병 3기라고 했다. 그 여공은 해고되고 말았다.

“왜? 왜? 왜? …” 전태일은 절규하며 썼다.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더러운 부한 자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사회의 현실입니까? 빈부의 법칙입니까?”(1970년 초의 소설 작품 초고에서)

“인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인간의 가치를? 희망과 윤리를? 아니면 그대 금전대의 부피를?”(1969년 12월을 전후해 쓴 글)

저항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맞서 처음 택한 방법은 시다와 미싱사를 관리하는 재단사가 돼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어서 빨리 재단사가 돼서, 노임을 결정할 때는 약한 직공들 편에 서리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어느 날 전태일이 피곤을 못 견디는 어린 시다들을 일찍 집에 보내고 작업장에 남아 할 일을 대신하다가 주인에게 들켰다. 그는 이 일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다.

재단사로서 불쌍한 시다들에게 잘해줄 수조차 없는 현실을 겪으며, 전태일의 고민은 깊어진다.

이즈음 ‘근로기준법’을 접한 전태일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노동”,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 등이 명시돼 있었다.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건을 노동자들이 ‘바보’처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는 바보회를 조직했다.

바보회는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설문 조사했다.

이들은 회생을 각오하고 힘들게 모은 설문 결과를 분석해 근로감독관실로 찾아갔다.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 위에 있는 전태일 열사 동상 ‘전태일 다리’도 공식 이름이 됐다. 이젠 그의 바람이 실현될 차례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알았으니 서류 두고 가라”며 전태일을 내몰았다.

전태일은 충격에 빠졌다. 노동청이 기업주들과 결탁한 것 아닌가? 전태일은 가슴이 가위에 눌린 듯 답답해졌다.

그러나 그는 부조리한 현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1970년 9월 전태일은 평화시장에 돌아가 삼동친목회(삼동회)를 조직한다.

삼동회 회원들은 업주에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설문지 1백26매를 성공적으로 받았다. 노동부에 낼 진정서도 90여 명에게 서명받았다.

결국, 1970년 10월 7일 <경향신문> 사회면 톱기사로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 실렸다. 오랜 침묵이 깨진 순간이었다.

다음날 삼동회는 8개 요구조건을 적은 건의서를 가지고 평화시장주식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대답뿐이었다.

정부도, 기업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전태일은 시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시위가 예정된 11월 13일 오후 1시, 삼시간에 노동자 5백 명이 국민은행 앞길에서 웅성거렸다. 시위를 시작하려던 삼동회 회원 몇 명이 경찰에게 심하게 맞고 끌려갔다.

잠시 후 전태일이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길에 휩싸인 채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왔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그는 몇 마디의 구호를 외치다 그 자리에 쓰러졌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는 온몸이 솟처럼 검게 탄 채,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영향

22살 전태일의 투쟁은 어둠을 밝히는 불꽃처럼,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선 성장, 후 분배” 구호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학생과 지식인 등이 노동 문제에 눈 뜨는 계기가 됐다.

전태일이 죽은 뒤 대학생 수백 명이 “극단화된 계층화 … 현 정권의 개발독재를 전 민중에게 고발”하며 투쟁에 나섰다.

전태일의 노력은 민주노조의 씨앗도 낳았다.

11월 22일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가 결정됐다.

그 뒤, 1972년에 동일방직과 원풍모방이, 1975년 중반에는 YH무역 등에서 민주노조 건설 투쟁이 벌어졌다. 1970년대 이들 노조에서 벌어진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는 투쟁으로 이어진다.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전태일의 외침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한 레미콘 건설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항의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3개월간 임금을 못 받던 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이었다.

“왜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더러운 부한 자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하는 전태일의 절규는 삼성반도체에 다니는 23살 여성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죽었지만 기업도, 정부도 책임지지 않는 오늘날에도 절절히 메아리친다.

지금도 노동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8만 원 내외.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청소 노동자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권리, 씻을 권리, 이주노동자들이 짐승처럼 인간사냥 당하지 않을 권리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기업과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커져야 한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전태일의 목소리가 우리 가슴에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정선영

북한 권력 세습과 삼성 세습은 다른 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삼성과 <조선일보>, 대형 교회 등의 세습도 비교했다. 남한도 그러니 북한도 문제삼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소수 지배자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행태는 남북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통찰은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민주·진보’라고 하는 일부가 이런 비교를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사회민주주의연대는 “정권의 세습이라는 문제와 기업 경영권이나 재산이나 직업의 세습이라는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뒤섞어 물타기하는 궤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참여당 유시민은 “기업은 사적 권력”으로 “한 기업이 세습 때문에 망하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간섭

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에 깔린 공통의 생각이다. 기업은 ‘사유재산’이므로 이를 ‘상속’하는 것은 ‘공공의 것’인 정치 권력을 ‘세습’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들으면, 삼성과 <조선일보> 등이 그 권력과 부를 이용해 선출된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해 온 일들이 떠오른다. 이들의 범죄는 단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데 있지 않다.

이들은 정치권력과 유착돼 있고 자신들이 로비해 만든 법을 위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결코 ‘관용’하지 않는다.

삼성은 수조 원대 비지금으로 행정·사법부 관료들을 관리해 왔고, <조선일보>는 상속세 폐지 등 꾸준히 부자 감세를 부르짖으며 보편 복지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호응해 1백조 원이 넘는 부자 감세를 실시하고 부동산 부자를 위해 4대강 죽이기를 강행하며 대기업을 위한 알짜 공기업 매각과 의료 민영화도 준비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돈과 권력은 칼 같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습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역대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2백20명이다. 이 가운데 열두 명은 보유 총액이 각자 1백억 원을 넘는다. 모두 재벌가의 자식들이다.

이들이 재산을 세습하는 것은 그것이 보장해 주는 권력(망)까지 세습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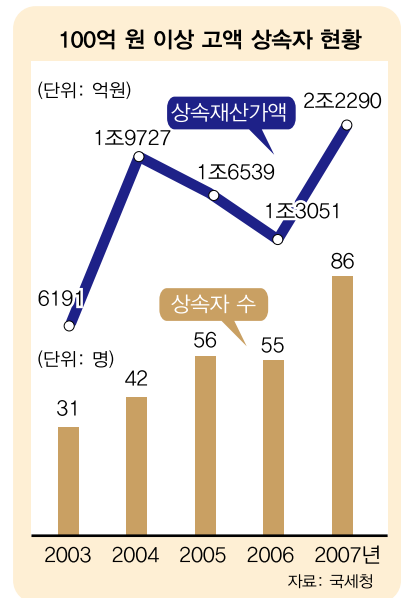
이다.

이처럼 권력과 부를 독점한 소수 지배자들이 평범한 다수를 지배하는 특권을 대물림한다는 점에서 남한 자본주의도 북한의 정치·경제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시장에 순응하는 종류의 개혁주의 정치로는 진정으로 우리 삶을 개선하는 것이 힘들다. 주대환이나 유시민 등은 기껏해야 시장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할 뿐이다.

무엇보다 삼성 같은 기업들을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 거대기업들이 조직하는 생산은 세계적 규모에서 협력적 노동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각 기업들이 고용한 노동



자들이다.

기업과 경제를 세습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계획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김문성

Report@left21.com

곳곳에서 투쟁과 저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1월 8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KEC 공장 점거 파업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전될 것입니다”

반도체 부품업체 KEC 노동자 2백여 명이 단호하게 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인화물질과 유독 가스 등이 가득한 곳에서 놀라운 투지와 용기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바로 20~30대 여성들이다.

이들은 1백30일 넘게 파업해도 탄압과 구조조정을 멈추지 않는 사측에 맞서 과감하게 점거에 돌입해 핵심 공장을 멈춰 세웠다. 무장한 경찰 1천2백여 명이 강제진압을 위협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승리하기 전엔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최규주 조직부장은 “여성 조합원들에게 농성장에서 나와도 좋다고 말했지만, 조합원들 스스로 끝까지 남겠다고 결의를 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점거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한소정 여성 부지회장은 <레프트21>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의 결의는 높아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결의가 더 높아지고 있죠,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온 거니까요.



투쟁 승리를 다짐하는 KEC 노동자들 이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 '쌍용차 트라우마'를 떨치고 과감하게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투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습니다. 찬 바닥에 박스만 깔고 비닐을 덮고 자는 것도 힘든 일이지요. 여러 조합원들이 집에 두고 온 아이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전될 겁니다.”

한 부지회장은 노동자들을 헌신짝 취급한 사측과 정부에 치를 떨었다.

“6월 30일, 사측이 직장폐쇄를 하면서 새벽에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도 용역들과 함께 우리를 쫓아내던 회사 노무과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죠.

“민주노조 깃발을 내리게 하려는 거

죠, 오래된 사람은 자르겠다고 하고, 아웃소싱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정치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 이 나라가 뭐 하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을 내서 싸울 수 있게, '밖에 많은 동지들이 연대 왔다' 하는 말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버틸 수 있게 해 주세요. 연대가 정말 너무 절실합니다.”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는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신속하게 연대집회를 개최했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이 기자회견 등을 열어 노동자들을 지지했다.

10월 29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도 계획됐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KEC 노동자들을 짓밟은 이명박 정부의 만찬 초청을 거부했고, 경찰 투입시 “모든 것을 걸고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강제 진압 계획을 발표한 지금, 더 많은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이 KEC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박설

동양레미콘

11개월 만에 움켜쥔 승리

지난해 11월 30퍼센트의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동양레미콘 노동자들이 11개월 만에 승리를 거뒀다.

사측은 건설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노동자들에게 양보했다.

전국의 50개 동양메이저 레미콘의 우선 용차계약을 합의서로 받아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원직

으로 복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끝까지 싸운 20명의 동지들은 다른 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동안 조합원들 사이에선 ‘레미콘 투쟁은 이기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동양레미콘 동지들은 대자본인 동양자본을 이겼다. 이번에 사측과 합의를 체결한 주체는 건설노조인데, 대자본이 건

설노조를 인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동양 자본의 악랄함은 최근 동양레미콘의 다른 공장에서 노조 간부가 비조합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사측이 조합원·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이 이번 비극의 원인이었다.

노동자들은 집회와 타워크레인 점거

등을 하며 끈질기게 싸웠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다른 업종의 건설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동양레미콘 물량의 70~80퍼센트를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타격을 줬다.

11개월 동안 투지를 갖고 싸움을 지속한 동양레미콘 동지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박재순 건설노조 서울북부 건설기계지부장

기룡전자

“자본이 강요한 분열을 뛰어넘어야 해요”

6년 동안 가히 초인적인 투쟁을 해 온 기룡전자 김소연 분회장(왼쪽 사진)이 <레프트21>을 통해 투쟁의 메시지를 전한다.

“기룡전자 사측은 파견 노동자들을 벌레 보듯 했습니다. 무자비한 해고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노조를 만들고 싸웠는데 다 해고된 거예요. 하지만 해고됐다고 투쟁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기룡전자 회장 최동열은 ‘당신들은 우리 직원인 적이 없다. 다시 고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난 6년간 단 하루도 출근 홍보전을 선 적이 없고 주1회 집중집회를 선 적이 없어요.

최근엔 기룡전자가 공장을 없애고 판 부지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사측이 압박을 받아서 교섭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또 최근 야 4당이 나서면서 사측을 압박하고 있죠.

[이번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기쁩니다. 집회에 참가하는 동지들이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 함께 싸웠으면 좋겠어요.

자본이 우리를 나눠 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일부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지만 이 분들도 바뀔 수 있어요. 기룡에는 정규직 노조가 없었지만, 비정규직이 싸우니까 정규직도 함께 3년을 싸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여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다면 투쟁으로 솟아올라 수 있어요. 낙관을 갖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투쟁들을 묶어서 더 큰 투쟁을 만들고 정치투쟁도 해야 합니다.

G20 회의에도 한발 나아가 문제제기하고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치적으로 삼고 싶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기회를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

동희오토

“투쟁을 통해 파견 노동의 문제점 폭로”

이백운 지회장(왼쪽 사진)이 동희오토 투쟁의 의미를 말한다.

“동희오토는 자본의 고용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상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의원 신지호도 한토론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혼용 업무가 불법파견의 소재가 되니, 아예 동희오토처럼 합법적인 파견, 즉 1백 퍼센트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합법적인 고용구조로 변환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이런 점을 폭로한 것이 동희오토 투쟁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희오토 투쟁이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계속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동희오토를 현대기아차 자본이 쉽사리 손대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투쟁을 몇 년간 지속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지요. 도저히 이 공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을 조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몇 명 복직한다고 해도 현장을 당장 바꾸긴 힘들어요. 1년 안에 해고될 가능성이 거의 1백 퍼센트죠.

그래도 현장 노동자들을 신뢰합니다. 예컨대 2008년에 성과급 투쟁을 했는데 성과급 인상하라는 스티커 붙이자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천장에 붙이고 차에다



붙이고 생산지시표에 붙이고 했죠.

그런 열망들이 당장 나서기는 힘들지만 내면에선 분노가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죠. 당장 우리가 탄압을 받을 때 같이 하진 못하더라도 같은 불만을 갖고 있고, 동희오토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들도 있어요.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청을 대상으로 한 투쟁에서 6년 동안 사람 취급도 못 받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교섭을 해 보기도 했죠. 당장은 꿈쩍도 하지 않지만,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죠. 이런 것들이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는 것은 몇몇 불쌍한 사람들이 복직하고 처우 개선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본이 만들어 낸 노동 탄압 구조에 파열구를 내는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윤필원

기아자동차

기아차 좌파는 우파의 선동에 단호히 맞서야

기아차 우파 ‘현장조직’들이 금속노조 탈퇴를 노리고 흠탕물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 지급’ 결정을 “용납 못한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 총회소집 요구 서명을 벌였다.

이들은 기아차 지도부가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해 “조합원의 임금을 갈취”하고 있다고 사태를 왜곡하기까지 했다.

임단협 찬반투표와 대의원대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억지다. 우파의 요구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파 ‘현장조직’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금속노조 탈퇴’와 ‘좌파 지도부 흔들기’다.

이들은 “기아차 노조를 패가망신시킨 장본인이 금속노조”라며 금속노조 조합비 납부를 중단해 전임자 임금을 충당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탈퇴는 노동자들에게 해로운 길이다. 광범한 단결이 기아차 노동자들의 고용·임금·노동조건 등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

‘금속노조 탈퇴’와 ‘정치투쟁 타파’를 외치며 ‘단결’과 ‘투쟁’이라는 무기를 내려놓자는 우파의 선동에 웃고 있을 자는 바로 정부와 기업주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파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이유다.

그런 점에서, 기아차 ‘원하청 공동투쟁단(준)’이 노조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원하청 공동단은 기아차 임단협 결과 “조합원의 피와 땀의 대가를 삼집간부 임금으로 충당”하게 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적잖은 좌파들이 이 같은 생각을 공유해 왔다. ‘노동자정치협의회’, ‘노동자전선’ 등은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비판했다. 사측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고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 지도자들을 회유·포섭하려고 지급하던 전임자 임금을 고수해야 할 ‘투쟁의 성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사측의 전임자 임금 지급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의 한국노총 시절부터 정부와 사측이 전임자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해 온, 청산해야 할 과거의 유산일 뿐이다.

기아차지부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 논란을 매듭짓기로 한 이상, 총회에서 우파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게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좌파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화성공장의 ‘금속노동자의 힘’ 활동가들이 우파의 진정된 의도를 들춰내며 논쟁을 이끌고 있듯, 정면 논쟁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우파의 ‘정치 투쟁’ 비난에 맞선 가장 효과적인 반박은 G20 항의 노동자대회 동원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일이다. (*기사 전문은 www.left21.com을 보시오.)

박설

서평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을 해부하다

1965년 <타임>의 올해 인물은 케인스였다. 헤드라인은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였다. 2002년 영국 노동당의 피터 맨델슨은 “오늘날 우리는 모두 대처주의자들이다” 하고 선언했다. 한 세대를 지배하는 ‘상식’이 변했다. 4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책은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득세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주된 무대는 미국이다.

1973년과 1980년의 대규모 경기후퇴가 미국 자본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레이건은 임금과 복지예산을 공격했다. 그러나 위기의 깊이는 단기간 전투로 메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국내적으로는 1960년대 저항 운동으로 생겨난 평등의 가치를 철저히 무너뜨려야 했고, 국외적으로는 세계 시장의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해 제국의 힘을 발휘해야 했다. 미국 지배자들에게는 이러한 계획을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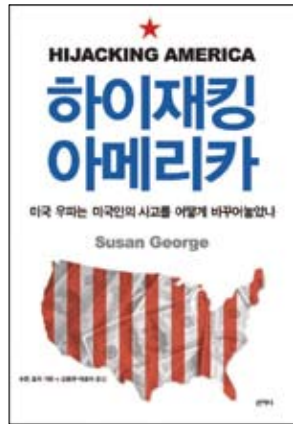
시킬 교리가 필요했고 신자유주의는 곧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구현할 제국주의의 표현이 됐다.

문화적 헤게모니

공격은 곧 대규모 캠페인이 됐다. 그들은 십수 년간 치른 전투 끝에 과거엔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시장지상주의 논리를 정설로 복귀시킬 수 있었다. 수전 조지는 이런 이데올로기적 변형 과정을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적 헤게모니” 개념에 빗대어 추적한다.

1970년대 들어 조건이 무르익자 우익 사상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핵심적인 우익재단과 우익연구소 들은 그런 진출의 교두보가 됐다.

6백여 보수재단과 기업, 개인 자선가들을 결집시킨 ‘자선원탁회의’는, 공공정책에 개입할 돈의 집단과 행동가 집단을 양성하고 지원해 줄 법률사무소에 기금을 제공했다. 월스트리트에서 우파의 ‘레



《하이재킹 아메리카》
수전 조지, 산지니, 1만 8천 원, 3백56쪽

닌’으로 불린 노키스트는 의회 간부, 언론인, 정부 관료들을 포함한 보수단체 대표 몇 백 명을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불러 놓고 그 주에 수행할 목표를 하달했다.

경제사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비판적 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전투가 수행됐다. 특히 종교적 우파들은 가족 가치를 옹호하고 ‘신체 정치학’으로 불리는 낙태, 성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켰다. 지적설계론이라는 세련된 창조론이 등장했고, 석유기업들의 지원을 업고 지구온난화 연구를 흡집 내리는 시도도 이어졌다.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소수인종의 권리를 빼앗는 일도 했다. 대중을 원자화된 개인들로 고립시키는 이 작업들은 자유로운 시장 거래라는 철학적 뿌리로 연결된 시장 질서를 방어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문화적 헤게모니”를 재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권교체 몇 번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미국에서 진보적 축을 자처한 민주당은 “대기업의 돈에 기대고 있”고 공화당과 함께 “복지 체계를 무력화”하는 공동 주체였으며 개탄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런 변화가 끝날 수 있다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진보세력”이 단결해 이런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고 대안을 생산해 확산시킬 “정치적 임무”를 분명히 하자고 제안한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시장의 정당성을 훼손했다. 이라크 전의 실패는 그들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설명력이 취약해지면 겁에 질린 국가는 무장력을 사용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들의 위기를 잘 이용한다면 “문화적 헤게모니”의 지적·도덕적 우위를 무너뜨리고 체제의 중심부를 공격할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수영

영화평

《월 스트리트 - 머니 네버 슬립스》 올리버 스톤 감독

스크린으로 보는 금융 자본가들의 탐욕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장 붕괴 이후 대중의 혈세를 빨아들인 대규모 공적 자금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금융 시장은 여전히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영화 <월 스트리트>는 탐욕, 배신, 도덕적 해이, 거짓과 모략이 난무하는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현실을 보여 준다.

금융사기로 8년간 복역을 마친 고든 게코(마이클 더글라스 분)가 2001년 출옥한 뒤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얘기는 시작된다. 바로 2008년이다. 고든은 거짓 정보로 상대방을 파멸시켜 정보보증으로 험값에 자산을 매수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격을 조작해 엄청난 이익을 챙겨 나간다.

영화에서는 은행 수장들과 정부 기관이 위기를 논의하는 장면이 두 차례 나온다. 거기에는 정부 관료 출신 은행가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

의 이익은 전혀 훼손시키지 않은 채 손실을 모두 정부 자금으로 메우려 한다.

정부 자금이란 것이 사실은 평범한 대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조금치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모두 평범한 대중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큰 걱정거리라면 공적 자금 투입으로 말미암은 국유화가 가장 큰 걱정일 뿐이다. 그들의 입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7천억~8천억 달러 구제금융 요청이 나온다. 1천조 원에 이르는 돈이다. 그러지 않으면 은행이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할 거라고 위협한다.

탐욕

또 하나의 인상적 장면은 고든이 《탐욕은 좋은 것인가?》라는 책을 쓴 뒤 강연을 하는 장면이다. 그는

9·11테러 이후 정부가 돈을 쓰라고 금리를 1퍼센트로 낮췄다고 한다.

빚져서 집을 사고 소비를 하는 와중에 CMO, CDO, SIV, ABS 같은 금융상품이 시장에 나돌아다녔다. 바로 모기지 담보부 증권과 자산 유동화 증권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증권화된 금융상품을 아는 이는 고작 75명밖에 안 될 것이라고 고든은 말한다.

과장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평범한 이들엔 그 속성이 생소하기 그지없는 금융상품들이다. 사실 이런 금융상품 거래는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수익을 증권으로 만들고, 엄청난 차익을 통해 시장에서 사고파는 투기를 하며 거품을 키우고, 누군가는 마지막에 꺼내고 터지고 마는 폭탄 돌리기 게임이다.

고든은 이것이 대량살상무기라고 말하며 파산으로 이어지는 미친 게

임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 폭발에서 터져 나온 파편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삶을 날이 갈수록 갈가리 찢어 놓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온다. ‘누군가가 당신의 돈을 가져가서 쓰고는 그것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아무런 필요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타인의 부를 갈취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도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것을 이용해도 한 번 부를 쌓아가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금융자본이다.

이 영화는 오늘날의 금융시장을 잘 보여 준다. 다만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고든조차도 금융시장의 추악한 한 부분일 뿐 건전한 조정자도 아니며 결코 정의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심호철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동부 사회포럼
G20 서울정상회의 - 고장난 자본주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연사: 강철구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공동행동 활동가)
일시: 11월 2일 (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성수 노동자센터 강당 (지하철 2호선 독성역 7번 출구)
참가비: 3천 원(학생 1천5백 원)
문의: 010-9372-2746

서울 서부 사회포럼
G20은 평등한 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는가?
연사: 정중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일시: 11월 3일 (수) 오후 8시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서울 남부 사회포럼
격동의 유럽 - 경제 위기, 긴축정책 그리고 저항
연사: 최용찬 (독일 베를린 경제대학 '세계화와 노동정책' 석사과정 수료)
일시: 11월 4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12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참가비: 3천5백 원 (학생 2천5백 원)
문의: 010-2401-1987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 경제 위기 고통전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연사: 강철구 (G20 대응 민중행동 사무국 활동가)
일시: 11월 4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3분 거리, CGV 뒤 건물)
참가비: 2천 원 (음료 제공)
문의: 070-8113-8541, 010-8481-2626

경기 남부 사회포럼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 경제 위기 고통전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2일 (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에서 수원역 등지고 직진 후 매산동 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세계적인 환율전쟁, G20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4일 (목) 오후 7시
장소: 건국대학교 (강의실 추후 '다함께' 웹사이트 공지)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9453-5318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이메일: alge@paran.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lgetorum>
사무실: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이메일: atgwestmail@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사무실: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이메일: algsouthmail@jrbn.net
블로그: http://blog.naver.com/hambu_forum
사무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이메일: jealltogether@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algibforum>
사무실: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장시복 칼럼

국제 협상의 역사에서 본 G20 정상회의

장시복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전임 강사

전후 세계경제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 협상이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에서 벌어졌을 때, 케인스의 과제는 미국에게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어 주지 않고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케인스는 영국이 겪고 있던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국제청산동맹’을 구상했다. 국제청산동맹은 일종의 세계 중앙은행을 창설하고 ‘방코’(국제 통화)를 통해 유동성이 부족한 나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었다.

44개국 대표가 참석한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협상의 중심에는 당연히 미국과 영국이 서 있었다.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미국 대표 화이트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인 영국 대표 케인스의 대립과 타협이 이 회의를 규정했다. 그럼에도 최종 합의는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한 미국과 이를 지켜보며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영국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이미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후 세계경제 질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후 세계경제 질서와 관련한 협상은 미국의 입장이 거의 그대로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74년 ‘G7의 탄생’이나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절상을 합의한 1985년 ‘플라자 합의’, 엔고로 인한 버블 붕괴로 일본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자 엔저 유도를 합의한 1995년 ‘역플라자 합의’, 1997년 아시아의 외

환위기 직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 협력 필요성이 대두해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국제 협상 대부분에서 미국은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관철시켰다.

진앙지

그런데 2006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위기는 새로운 국제 공조를 실행하는 역사적 장을 열었다.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경제 위기로 세계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고 국제 협력 없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했다. 가장 다급한 나라는 물론 미국이었다. 세계경제 위기의 진앙지이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씨름하는 미국으로서 국제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를 국제 공조의 틀로 선택했다.

G20 정상회의는 브레턴우즈 회의 이후 세계경제에 필요한 국제 공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브레턴우즈 회의 당시 미국의 헤게모니적 위치와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처지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제 미국은 변화하는 힘의 역관계 안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G20 정상회의는 지는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과 떠오르는 대안 헤게모니 국가인 중국이 대립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미

국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처럼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헤게모니를 유지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의 규정력은 헤게모니 대체가 아니고 헤게모니를 둘러싼 신경전일 것이다.

국제 협상의 관점에서 G20 정상회의는 브레턴우즈 회의와 같은 결정적인 역사적 순간은 아니다. 역사적 순간은 더 먼 미래의 일이며 G20 정상회의는 과도기적이고 한시적인 국제 협력의 장일 뿐이다. 몇 개의 의제를 조율하고 형식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중요 의제는 협의 과정 속에 계속 남겨 두고 미국과 중국의 이해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들이 불쑥 불쑥 제기되는 장이 G20 정상회의인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11월 11일과 12일에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평가했지만, 의장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계의 중심에서 살바를 쥐고 힘을 겨루는 두 나라의 신경전을 말리는 일에 국한될 뿐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기라 남을” 엄청난 성공을 자축하겠지만, 그 성공은 지금의 세계질서에서 힘의 역관계를 구성하는 두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신경전을 말린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 노조의 투쟁이 노동자 간 격차를 벌리는가?

최근 김태현 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레디앙>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가 ... 중소기업장의 노동조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90년대 초까지는 이어졌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고리가 끊어졌다. 상층 대공장 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이 중소기업장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차를 벌리게 되었다.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 등의 노동조건이라는 게 ... 사내하청이나 원하청 노동자들의 뒤통에서 때어낸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견해는 노동운동 내에서 하나의 ‘상식’처럼 돼 있다. 일부 급진좌파까지도 이런 견해를 받아들인다. 이런 견해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성과를 무조건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보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 간 격차를 먼저 봐야 한다. 이것은 지난 IMF와 2008년 경제 위기 등을 거치며 확대돼 왔다. 예컨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1996년 62.6퍼센트에서 2009년 60.6퍼센트로 감소했다.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에 주로 주목하는 사람들은 계급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자본가 계급의 이윤 몫을 빼앗아 오는 계급투쟁을 중시하지 않고 계급투쟁의 자체나 노동계급 일부의 양보를 주장하게 된다.

더구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성과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까지 끌어 올리는 고리는 끊기지 않았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10.6퍼센트로 지난 10년 새 가장 높았던 2003년에

는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도 10년 새 가장 높은 6.9퍼센트를 기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전반적으로 임금을 균등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한겨레21> 794호).

지배자들은 이런 효과를 잘 알고 있다. 경총은 2006년에 “5천 명 이상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평균임금이 올라간 것”(〈최근 임금 교섭 특징 및 과제〉)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경제 위기 때 이명박 정부가 제일 먼저 대기업의 임금 동결을 강요했던 것도 이런 효과를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2퍼센트로 지난 10년 새 가장 낮았던 2009년에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도 10년 새 가장 낮은 -3.4퍼센트를 기록했다. 정규직 노조도 양보하는데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알아서 임금 인상을 얻어 낼 순 없는 일인 것이다.

이간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뒤통에서 때어낸 부분이기도 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때어간 것이 아니라, 기업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때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여섯가지 신화).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은 그들의 높은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것이다. 많은 산업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생산성도 더 높다. 자본은 이런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양보할 각오가 돼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 노동자들에게서 더 많

은 이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노동자 내부의 격차는 벌어져 왔다. 노동부가 통계낸 것을 보면 노조 유무별 임금 격차가 1990년대에는 20퍼센트 미만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40퍼센트까지 확대됐다. 특히 격차의 “상승은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 시기에 나타났다.”(김장호 교수)

이것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투쟁하면 더 효과적으로 임금을 올릴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러기 힘들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김장호 교수가 분석한 것을 보면 최근 10년간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보다 해마다 평균 5.1퍼센트 정도 더 임금을 올려 왔다.

노조라는 방패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격을 막아내기도 더 어렵다. 실제로 노조도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이번 경제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물론 이런 상황을 방조하거나 외면하는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태도는 문제지만, 결국 지배자들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가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벌려놓은 것이다. 지배자들은 또 이 격차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한다.

따라서 우리는 저들의 이간질에 이용될 수 있는 잘못된 ‘상식’을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쟁취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런 투쟁에 적극받아 노조 건설과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해야 한다.

무엇보다 두 부문의 노동자가 연대해서 복지 확대 등 지배계급의 몫을 빼앗아 노동계급의 몫을 늘리는 계급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전지윤

논설

프랑스의 모범을 따르자

“나는 계급투쟁한다”

요즘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정부에 맞서 거리에 나온 노동자와 청년 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호다. 그리고 이 “계급투쟁”은 점점 더 돌아오고 있다.

프랑스 내 정유공장이 모두 파업 노동자들에 의해 봉쇄됐고 핵 발전소도 가동이 중단됐다. 철도·항만·공항·도로 등이 모두 파업으로 마비됐다. 거의 매주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파업과 시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은 프랑스를 움직여 온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증명했다.

파업은 현재 프랑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청년 학생들이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동맹 휴업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연금 개혁을 안 하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간다’는 식의 사르코지의 이간질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교사 노동자와 학생 들이 함께 학교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로마(집시)를 마녀사냥해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으려던 사르코지의 시도도 역풍을 일으키며 실패했다. 반(反)사르코지 투쟁 속에서 인종적 단결이 이뤄지고 있다.

민영화된 프랑스텔레콤에서 지난 3년간 무려 45명이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것을 본 프랑스 노동자들은 사르코지의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자”는 제안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재벌인 로레알과 사르코지의 더러운 유착 관계가 폭로된 베탕쿠르 게이트를 보면서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는 너희의 금고를 털 차례다. 돈은 베탕쿠르의 금고에, 부자들의 금고에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조 지도부의 통제 속에 투쟁을 마무리하거나, 2년 후의 대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사르코지를 무릎 꿇게 할 더 강력한 파업이 필요하다. 이미 정유·발전 노동자 들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도 61퍼센트가 무기한 파업을 지지했다. ‘68의 부활’은 실현돼야 한다.

국제적

68 반란의 특징 하나는 그것이 국제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도 국제적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에서도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도 이런 투쟁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그리고 그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G20 정상회의가 그것이다.

G20 회의는 탐욕스러운 지배자들의 요란한 말잔치다. 이미 그 말잔치는 시작됐는데, 환율전쟁을 가까스로 봉합해 놓고 “파격적 합의”나 “극적 성과”니 떠들고 있다.

그러나 G20의 진정한 본질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부자와 기업주 들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손해”라는 이명박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고통전가를 위한 G20 회의가 잘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노동자·민중에게 손해다.

G20 지배자들은 모두 자국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추진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환경 파괴로 지구를 재앙으로 몰고가고 있는 주역들이기도 하다. 미국·영국·독일·한국 정부 등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해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들이 3중의 방호벽과 2킬로미터의 ‘명박산성’, 각종 살상무기로 무장한 경찰병력의 호위를 받으며 논의할 내용이 무엇일지는 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이 때문에 G20을 반대하기보다는 이용해야 한다거나, G20 저지에 별로 힘을 기울이지 않으려는 NGO나 일부 좌파들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사활을 거는 G20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운동의 힘을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와 학생 활동가들은 작업장과 대학과 거리에서 G20에 반대하는 선동을 해야 한다.

11월 7일 노동자대회와 11월 11일 G20 규탄 민중행동의 날의 성공적 건설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항의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연대가 될 것이며, 이 나라에서도 프랑스에서와 같은 거대한 계급투쟁을 건설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목: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라

이명박 정부가 진보정당 후원 교사 1백34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는 최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10월 말까지 해당 교사를 파면·해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월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표현된 대중적 진보 교육 열망 때문에 징계 절차를 법원 판결 뒤로 미뤄 온 시·도 교육청들은 속속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를 위축시키고자, 전교조 탄압과 '교사 대학살'을 자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정치 활동에 일관되게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

교총이 한나라당 후원금을 공개 조직하고, 이주호가 차관 시절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전교조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것, 교사들이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만 문제 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당선한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활동을 보장"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했다. 교총마저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를 요구하는 마당에 진보정당 후원이 교단을 떠나야 할 만한 징계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로봇

법률상으로 공무원과 교사 들은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가 있고, 정치 활동도 금지돼 있다. 보수 언론들은 교사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감수성'이 큰 학생들을 몰들인다고 호들갑을 떠난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들더러 정부 정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혼 없는 로봇처럼 명령에 따라 움직이라는 강요다. 일제고사 때문에 초등학생마저 보충 수업으로 내몰려도,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를 경쟁시켜도, 귀족학교를 만들어 평준화를 해체해도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최근 교과부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과 '나라사랑'을 가르치겠다고 한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정부 자신이 매우 '정치적인' 교육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10월 27일 교사 대량 징계 항의 촛불문화제

G20 국가들 중 하급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교사들은 민주적이고 경쟁 없는 교육을 위해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 온갖 탄압과 마녀사냥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온 전교조 교사들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벌이며 대응에 나섰다.

진보교육감 여섯 명도 교과부의 방침

에 반발해 '징계유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 더 나아가 진보교육감들은 징계 절차를 법원 판결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징계 자체를 거부하고 여섯 명이 힘을 합쳐 대중적 항의를 호소하며 정부에 맞서야 한다.

진보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족쇄에 갇히지 말고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김연오 전교조 조합원

학생들을 좀비에서 인간으로 만들 학생인권조례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전 국민의 인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된 인권이 유독 10대 학생들에게만 제한돼 왔던 현실 때문이다.

'학생다움'이라는 미명 아래 똑같은 머리, 똑같은 복장을 요구받고, '교육의 필요'라는 미명 하에 폭력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다. 이 같은 현실을 더는 '교육'으로 포장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너무나 건전하고 상식적이다.

만지

그럼에도 조·중·동 등 보수 신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선동 조례"라며 색깔을 덧씌우고, '포퓰리즘에 근거한 무분별한 정책'이라며 진보교육감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

보수 신문들은 '두발·복장 등 개성 실현'이 빈부 격차를 드러낼 것이라는 등, '보충·야간자율학습 선택권'이 사교육을 기승 부리게 할 것이라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절대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등 계속 만지를 걸고 있다.

또 교총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제나 자립형사립교가 확대되면서,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를 드러내는 '교복'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강제보충과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가? '민주 시민'을 기른다는 학교에서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모든 내용을 G20 정상들이 안다면 다들 코웃음을 칠 것이다.



9월 27일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에 항의하는 교육시민단체들

더구나 교사들이 학생의 머리카락 치마 길이를 재러 다니느라 바쁘고, 학생들을 반강제로 야간자율학습에 남게 하고, 절반 이상이 없으려 자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교권 추락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게다가 교장이 용의복장 지도를 위해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체벌한 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 통제는 교사 통제의 근거로 이용된다.

따라서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갈 쓰여야 할 곳에 교사들의 창조적 역량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최근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을 다시 징계의 도마 위에 올렸다. 만약 학생들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됐다면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이미 보장됐을 것이다.

학생들을 공부만 하는 기계,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된 백치로 만들고자 하는 교육 현실에서, 숨 쉴 곳을 만드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지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학생들을 '좀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조영선 전교조 조합원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레프트21에서 접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리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